

2006 연구보고서 -3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변화순 · 김혜영 · 윤홍식 · 한지숙

KWADI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연구책임자 : 변 화 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혜 영 (본원 연구위원)
 윤 홍 식 (전북대학교 교수)
 한 지 숙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이혼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심리적 안정성을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혼의 증가는 남성의 생계부양자 모델에 의해 설계된 사회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결혼관계 내에서 성별분업에 근거해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에게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가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단순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종사상의 낮은 지위와 불안정성, 만성적인 저임금 등의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직종 및 직업 지위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책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연구과정에서 연구내용에 관해 성심껏 자문해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 조사기관 담당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 서 명 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비율 증가가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 가구 가운데 이혼가구주의 비율은 1985년 11.9%에서 2000년 21.9%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가운데 여성이혼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9%에 달하고 있다.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 볼 때, 이혼가구주의 증가는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이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종사상의 낮은 지위와 불안정성, 만성적인 저임금 등으로 일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단순히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심리적 안정성을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이혼이 갖는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한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혼한 여성들의 직업 및 소득변화에 관한 연구는 시계열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패널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성의 패널 데이터는 대단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가족해체를 전후 한 이혼여성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취업유무와 직종 및 직업지위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여성의 개인근로소득 및 가구소득수준의 변화와 함께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봄은 물론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패널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한국의 가족변화와 이혼에 대한 전반적 추이
-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구조적, 개인적 요인 파악
-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취업지위의 변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 시장지위 및 계급지위 분석
- 이혼을 전후로 한 이혼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임금소득, 가구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비지원 혹은 자립자활), 사적이전소득(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 수급 여부) 변화 분석
- 심리·정서적 상태 및 스트레스 및 사적 연결망의 변화 분석
-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와 이혼여성의 탈빈곤화 정책의 주요방향 제언

나. 조사방법

- 이혼 후 여성의 직업지위 및 소득변화를 통해 이혼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혼 전, 이혼당해연도, 이혼 후의 세 시점 간의 소득을 비교해서 소득 증감 및 소득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직업지위의 변화는 비교적 불연속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생애사건이라는 점에서 회고적인 면접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응답결과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자들을 이혼한지 3년 내외의 여성들로 최대한 제한하고, 조사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50:50으로 할당표집 하였다. 또한, 이혼여성에 대한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지 3년 이하의 여성들의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임의표집방식을 사용하였다.
- 이혼관련 단체에 협조를 의뢰하여 눈덩이 표집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는 가구 소득에 따른 저소득층/중간층 각기 50:50의 할당 표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설계가 기획되었으나 최종 수집된 자료는 총 274부이다.
- 직업변동이나 이혼여성의 심리적 변화에 관한 분석에서는 비교적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응답의 신뢰도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설문지 274부 모두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소득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이혼 이후의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소득에 관한 정확한 응답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혼 후 경과기간이 4년 이내인 사례 수만을 골라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혼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적절한 22개의 사례를 제외하여 총 252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다.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평면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혼을 경험한 이혼여성가구주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조사현실을 고려하여 이혼한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조사대상자를 포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혼 여성의 현재 소득에 대한 분석은 이혼 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소득수준 및 구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직접 화폐소득을 사용하기보다는 소득대비유구비율을 사용하였다. 소득대비유구비율은 소득시점의 (물가와 일부 소득상승분이 반영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므로 비교 시점차이에 의한 소득수준 비교의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고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본 연구

의 고유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가. 이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이혼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 이혼 여성

- 본 연구의 이혼여성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와 40대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0.0세로 나타났다.
-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20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혼기간을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여성들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녀유무를 보면, '자녀가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7.5%,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은 36.1%, 2명은 42.3%,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4%이다.

○ 이혼한 여성의 전배우자

- 전배우자들은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3.2세였다.
-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62.0%가 고졸, 29.6%가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
- 이혼당시 전배우자의 74.1%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무직 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두 직종을 합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 이혼 당시 전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만원 이하인 비율이 200만원이상인 비율보다 높았는데, 131~20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28.6%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당시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응답 또한 24.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이혼의 사유 및 형태, 기간별 특성

○ 이혼 형태 및 경과 기간

- 본 조사대상자의 83.2%는 협의이혼의 형태이며, 이혼까지 소요된 시간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이혼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기간은 3년 내외로 제한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경과된 응답자가 10명(3.7%)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소득변화추이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 처음 이혼의 이야기 시작

- 가장 처음 부부간에 이혼이야기가 나타난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약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17.9%, ‘배우자의 폭언/ 폭력’, ‘배우자의 빚, 보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을 원인제공자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의 원인제공이 87.9%로 본인의 6.3%보다 높았으며, 부부 상호간의 문제는 5.8%로 낮았다. 배우자에 의한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본인에 의한 이혼 사유 부분은 ‘나의 경제적 무능력’, ‘나의 빚, 보증’, ‘나의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부분에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부부상호 간의 원인에 의한 사유에서는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이 2.9%로 높았다.

○ 이혼의 결정적 사유와 원인

- 이혼의 결정적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역시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 ‘배우자의 폭언/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이야기가 시작된 주요 사유나 이혼실행의 결정사유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원인제공자별로 살펴보면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와 같이 배우자에 의한 부분이 81.4%로 가장 높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인과 부부 상호간의 사유 부분이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보다 각각 3.2%포인트, 3.3%포인트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기간별 이혼

- 이혼 기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이혼한 지 1년 이하에 해당되는 집단 가운데 40대의 비중은 50.0%, 30대가 41.4%로 30-40대가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년 이하의 집단에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9.0%, 43.0%가 분포되어 있었다. 2~3년 이하 집단 역시 또한 30대와 40대가 50.0%, 41.5%이며, 3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는 40대의 연령층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 이혼여성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이혼 기간 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이혼 1년 이하의 집단에서 대졸이상의 학력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혼한 지 1년 이하의 집단에 속한 이혼여성들의 평균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평균교육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혼여성의 생활실태

○취업 상태 및 종사상 지위

- 이혼여성들은 현재 전체 응답자의 83.2%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혼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더라도 여성들의 구직활동이나 직업 위세가 낮은 현실에서 이들의 취업상태를 직종과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취업한 이혼여성의 60.1%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20.2%), 사무직(1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0.9%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인데 비해 응답자의 33.3%만이 상용직이라고 답하고 있어 이혼여성들의 고용 지위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소득

-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이들의 약 40% 이상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곧 이혼여성들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함께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고용조건에 놓여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월평균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전체 취업한 여성의 60.9%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이라고 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총 가구소득 수준 역시 '소득이 없음'이거나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64%에 달하고 있어 이혼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거주 상황

- 거주 및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이혼여성들의 30.3%가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7.9%는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 집에서 거주한다는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75.2%는 20평 미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 선택에서 고려되었던 점은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층 수준

- 응답자들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들의 계층수준을 살펴보면, 이혼 여성의 47.4%는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해서가 최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7.2%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상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심리·사회적 변화

○자녀유무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화

- 전반적으로 이혼 여성들은 이혼을 전후로 해서 이혼전에는 불안정하다가, 이혼당시에는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이혼 후 1년이 지난 현재에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 이혼후 자녀양육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화를 경험하게 되면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한다.
- 이혼여성들의 자녀유무가 이혼 1년전, 이혼 당시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혼 후 현재 정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 유무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화

- 현재 취업 유무는 이혼 여성의 전반적인 정서 부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가 있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것은 현재 정서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형태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화

- 이혼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협의이혼이 이혼 1년 전 정서와 이혼 당시 정서에 더 안정적이었다.

○스트레스

- 이혼여성들은 자녀유무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가사노동의 부담,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부족, 건강상의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교류

-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 전, 그리고 이혼 후에 도움이 되었다.

나.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직업지위 변화

- 결혼관계의 해체는 여성에게 배우자와의 결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주생계소득자의 상실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접근가능성의 감소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 본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이혼이후 취업지위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이혼으로 여성 스스로가 생계부양자가 되기 위한 취업활동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변화이다.

- 이들의 직업변동을 직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새롭게 취업한 직종의 대부분은 서비스판매직이거나 단순노무자이며, 이들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직이거나 임시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다.

- 여성의 계급지위를 이혼 전후로 비교해 본 결과, 이혼 후 여성들이 확보한 노동시장 지위가 임시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지위 이동은 주로 하향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혼한 여성 가운데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자산 확보가 마련된 여성들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게 되지만, 이들이 이동해 갈 수 있는 직업이나 계급적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 이혼을 경험한 여성(한부모)가구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이혼의 경제적 영향과 한국사회안전망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구사회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혼 전 여성의 취업여부가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무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여성개인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이혼 전, 당시, 후를 거치면서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변수들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미성년아동의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는데 반해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모 일정부분 분담한다면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4. 정책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관계없이 일을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본 분석결과에서 보듯 여성에게 일이란 한국사회에서 독립적 가구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수요창출 방법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사회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요구

된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변화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성별 직종분리,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진입의 증가로 인한 성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 후 여성들이 확보한 노동시장 지위가 임시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지위 이동은 주로 하향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노동시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은 임금노동, 여성은 돌봄노동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혼 한부모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대응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남성생계부양자를 준거로 제도화된 사회보장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은 양(편)부모의 자녀로서, 부부로서, 자녀의 부모로서, 한 부모가구의 가구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families) 안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보장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라는 전형적인 가족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능을 다원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를 가족 내 돌봄 등의 필요에 따라 경력단절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비정규, 임시직 노동자 등)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넷째, 더불어 특수한 조건에 처한 시민들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별도의 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한부모가구를 위한 한부모가구수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혼전 혹은 이혼과정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혼상담,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혼후 여성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혼 전, 이혼 당시의 심리상태가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유책주의에 입각한 재판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야만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혼과정에 갈등을 조정, 해소할 수 있는 갈등해소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주위의 편견을 없애고, 대화에 있어서 이혼당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혼과 관련된 후속적 연구로서 이혼후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연구를 통해 젠더간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혼은 여성에게만 아니라 남성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법적 지위는 국가에 따라 양상이 다르므로 향후 각국의 동거율 및 이혼율 비교와 이로 인한 해체율의 연구를 통해 이혼이 갖는 비교문화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이혼후 여성/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패널 연구를 제안한다. 본 분석은 여성(한부모)가구의 이혼 전후 소득수준에 대한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의 대표성에 관한 고유한 문제와 함께 본 자료가 회고적 방법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대표성이 있는 패널자료를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목 차

요약본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가. 조사방법	7
나. 분석방법	9
4. 연구분석틀	11
5. 연구의 한계점	12
II. 한국의 가족변화와 이혼	15
1. 가족의 구조변동과 이혼의 증가	17
2. 이혼의 유형과 특징	21
3. 이혼가족지원정책 현황	27
III. 이론적 배경	33
1. 기존연구 동향	35
2.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요인	42
가.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여성노동	44
나. 노동시장의 구조	47
다. 사회제도적 측면	48
라. 이혼 여성의 인적 자본	51
3. 이혼의 심리사회적 결과	53

IV. 조사결과	59
1. 이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1
가. 이혼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61
나. 이혼의 사유 및 형태, 기간별 특성	63
다. 이혼여성의 생활실태	69
2.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직업 및 계급지위 변화	73
가. 이혼여성의 직업지위 변화	75
나. 이혼 후 여성의 계급지위 변화	84
다. 소결 및 함의	90
3.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92
가. 분석방법 및 변수의 구성	93
나. 이혼을 전후한 여성의 소득변화	96
다. 이혼여성의 빈곤지위변화, 사회안전망의 역할 및 빈곤 결정요인	103
라. 소결 및 함의	112
4.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심리·사회적 변화	115
가. 이혼 여성의 심리·정서적 변화	115
나. 이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의 변화	119
다. 소결 및 함의	123
V. 요약 및 정책제언	125
1. 요약	127
2. 정책제언	129
■ 참고문헌	135

표 목 차

<표 I-1> 연구의 지표 및 설문문항	6
<표 I-2>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9
<표 II-1>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수 추이	18
<표 II-2>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19
<표 II-3> 주요 OECD 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2001~2005)	20
<표 II-4> 평균 초혼 연령	21
<표 II-5> 평균이혼 연령	22
<표 II-6> 동거기간별 이혼율	23
<표 II-7> 한부모가구비율	24
<표 II-8> 이혼사유별 이혼율	25
<표 II-9> 부부불화의 세부항목 구성 비율	25
<표 II-10> 협의 및 재판이혼 건수와 비율	26
<표 II-11> 2006년 모·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9
<표 III-1> 1년 전에 비교한 가족생활 변화	55
<표 IV-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1
<표 IV-2> 응답자 전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2
<표 IV-3> 이혼 사유 및 이혼 경과기간	63
<표 IV-4>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	64
<표 IV-5> 이혼의 결정적 사유	66
<표 IV-6> 이혼 기간별 연령	67
<표 IV-7> 이혼 기간별 교육수준	68
<표 IV-8> 이혼 기간별 자녀 수	68
<표 IV-9> 응답자의 현재 취업과 직업상태	70
<표 IV-10> 응답자의 현재 평균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가구소득	71
<표 IV-11> 응답자의 현재 거주 및 주택현황, 주거면적과 현 거주지 고려요인	72
<표 IV-12> 응답자의 현재 전반적 생활수준	73
<표 IV-13> 이혼을 전후로 취업지위 변화	76

<표 IV-14> 이혼 기간별 현재 취업 여부	76
<표 IV-15> 시점 변화에 따른 학력별 취업 여부	78
<표 IV-16> 현재 동거 자녀수별 취업 여부	79
<표 IV-17> 시점 별 취업변화 유형	80
<표 IV-18> 시점 별 여성의 직종변화	81
<표 IV-19> 시점 별 직업지위의 변화	83
<표 IV-20> 시점 별 이혼 여성의 계급지위 변화	86
<표 IV-21> 이혼당시의 부부간 계급일치여부	87
<표 IV-22> 이혼당시의 부부간 계급일치여부	88
<표 IV-23>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6
<표 IV-24>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전체	97
<표 IV-25>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양육자	98
<표 IV-26>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비양육자	98
<표 IV-27>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취업자	100
<표 IV-28>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비취업자	100
<표 IV-29> 이혼을 전후한 소득수준(소득-육구비율)의 변화: 아동양육 여부	101
<표 IV-30> 이혼을 전후한 소득수준(소득-육구비율)의 변화: 이혼 전 취업상태	102
<표 IV-31>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 전체	106
<표 IV-32>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 아동양육여부	107
<표 IV-33>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 취업여부	108
<표 IV-34> 이혼전후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10
<표 IV-35> 이혼 여성의 심리·정서적 상태	115
<표 IV-36>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정서적 상태의 차이	117
<표 IV-37> 이혼 여성의 스트레스	118
<표 IV-38> 자녀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119
<표 IV-39> 이혼 여성의 친구 및 직장동료와의 교류	120
<표 IV-40> 이혼 여성의 친정 및 시댁과의 관계	121
<표 IV-41> 시점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와 심리·정서간의 관계	122

그림 목 차

[그림 I-1]	이혼 전후 소득과악 시점 지도	10
[그림 I-2]	연구분석틀	12
[그림 IV-1]	시점 경과에 따른 교육수준별 취업률 변화	77
[그림 IV-2]	이혼 후 취업한 여성의 직종	82
[그림 IV-3]	이혼 후 취업한 여성의 종사상 지위	84
[그림 IV-4]	이혼 당시와 이혼 후 여성의 계급지위변동	89
[그림 IV-5]	이혼을 전후한 빈곤율 변화	104
[그림 IV-7]	이혼 여성의 심리·정서적 상태	116
[그림 IV-8]	이혼 여성의 시점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변화	12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4. 연구분석 틀	1
5. 연구의 한계점	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비율 증가는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해체가 여성 및 아동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성한부모와 여성가구주 집단이 과거에 비해 수적인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구성적 측면에서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Lewis and Hobson, 1997). 즉 과거에는 주로 사별요인이 여성가구주의 주요 발생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사별요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이혼이나 미혼에 의한 여성가구주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 가구 수에서 이혼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11.9%에서 2000년 21.9%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에서 여성이혼가구주가 2000년 16.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 볼 때, 이혼가구주의 증가는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한국의 경우 이혼, 사별로 인한 저소득 모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지만(장혜경, 2002; 박영란 외, 2003), 이혼 전후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접근한 종단적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1998년부터 2003까지 총 5년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 및 별거상태에 이른 161명을 추출하여 이혼 1-2년 전의 이혼자가 속한 가족의 총소득과 이혼 1-2년후 이혼자가 속한 가족의 총소득을 비교한 김미숙 외(2005)의 연구가 이혼 여성의 빈곤화를 접근한 연구라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혼을 전후로 한 단순 가구소득의 평균비교일 뿐 소득의 변화 양상 및 가구원 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혼의 증가를 단순히 사회적 측면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의 기본 전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이혼의 증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본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비록 한국은 복지국가에 초입에 들어선 상태에 불과하지만 복지체제의 기본 전제는 남성생계부양자와 피부양자인 여성과 아동을 상정

하고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임금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노동자가 직면하게 되는 소득상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설계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령 노동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존이 목적만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 역할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등은 한국 사회보장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 현재 여성의 국민연금 적용률은 16.9%에 불과한데 반해 남성의 적용률은 여성의 두 배가 넘는 34.3%라는 사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5)은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파생적 권리(배우자의 수급권에 근거한 권리)에 기반 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했을 때 높은 이혼율은 성별분업에 근거해 남성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결혼관계 내에서 성별분업에 근거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제공했던 여성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가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혼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심리적 안정성을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은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2).

서구의 경우 이혼 및 별거를 전후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화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공공부조 수급율의 변화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비교에서 더 나아가 가족해체를 전후 한 여성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을 살펴 보는데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최근에 와서야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고,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소득구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이혼 여성들은 역시 노동시장에서 종사상의 낮은 지위와 불안정성, 만성적인 저임금 등으로 일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혼한 여성들의 직업 및 소득변화에 관한 연구는 시계열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패널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성의 패널 데이터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 여성가구주의 탈빈곤화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보고서라기 보다는 그 전초적 작업으로서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직종 및 직업지위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가족변화와 이혼에 대한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구조적, 개인적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이들의 노동시장의 직업지위와 소득변화, 이에 바탕을 둔 계급이동 여부 및 빈곤지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전후로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변화를 이혼전, 이혼당해연도, 이혼 후 시점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취업여부, 직종, 종사상의 지위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이혼을 전후로 한 이혼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구성변화가 임금소득, 가구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비 혹은 자립자활), 사적이전소득(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 수급 여부)에 따라 각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와 소득의 변화는 물론 부양자녀 유무에 따른 심리·정서적 상태 및 스트레스, 연결망의 변화를 이혼전후로 비교해 볼 것이다.

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와 이혼여성의 탈빈곤화 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사지표와 항목별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의 지표 및 설문문항

지표	설문문항
인구사회학적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결혼 및 이혼기간, 이혼사유, 이혼방식, 이혼까지의 소요기간 - 동거가구원 수 - 전배우자의 연령, 학력 - 자녀의 유무와 수 · 연령 - 주택 및 거주지의 환경 및 변화(이동 유무)
직업관련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여성의 취업유무, 직업의 특성 및 소득수준, 주당 근무시간, 직장이동 경험, 가정과 직장양립의 어려움, 비취업의 사유, 취업욕구 - 이혼 당시 전배우자의 직업유무 및 종류, 소득수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주관적인 계층귀속의식
소득관련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1년 전, 이혼당시, 이혼 후 3개의 시점에서 각각의 월평균 개인근로소득,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 이혼당시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현재 가구소득구성형태 - 공 · 사적 이전 소득의 유무와 종류, 월평균액: 공공부조 수급 여부 및 월평균 액수, 본가 및 배우자 본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여부 및 액수,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유무 및 월평균액
심리정서관련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심리정서적 상태의 변화 - 항목별 스트레스(11가지) -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의 네트워크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이혼 후 여성의 직업지위 및 소득변화를 통해 이혼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직업지위의 변동은 이혼 전후를 기점으로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되거나 새로운 직종 및 지위로의 이동을 조사하고자 한다. 소득은 이혼 전, 이혼 당해연도, 이혼 후의 세 시점간 비교를 통해 소득 증감 및 소득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수직적인 직업지위의 변화는 개인생애에 있어 대단히 빈번하게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기 보다는 비교적 불연속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생애사건이라는 점에서 회고적인 면접조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안정된 응답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여성의 근로소득, 가구근로소득과 가구총소득 및 공·사적 이전소득이 시간이 경과함(이혼전과 이혼당시, 이혼 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야 하는 소득변화의 경우에는 이들의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응답결과의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응답결과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이혼한 시점을 다음과 같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I-2>.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이혼 한지 3년 내외의 여성들로 제한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이혼 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을 각각 50명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이혼여성들이 이혼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동태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직업 및 지위변동과 평균근로시간은 물론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월평균가구소득 등의 문항구성과 배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50:50으로 할당표집하였다. 이제까지의 이혼여성에 대한 연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은 이혼 여성의 총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월평균가구소득이 150만원 이상으

로 설정하였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가구원 수의 변동에 따른 차이를 동반할 수 있으나, 이혼가구의 평균가구원 수에 대한 전국규모의 자료나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에서 나타난 재가이혼가족의 평균소득과 2005년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평균소득과 소득분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에서는 재가이혼가족의 실태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데, 조사결과 여성이혼가족의 소득자수는 1.30명이며 평균소득은 132.17만원(남성의 경우는 소득자수가 1.39명이며 평균가구소득은 145.1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5년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가구소득이 65.26만원이나 최소 0~최대 120만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조사결과를 모두 고려하되, 물가상승률과 조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은 이혼여성의 총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월평균가구소득이 15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표집방법에서 본 연구는 무엇보다 이혼여성에 대한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지 3년 이하의 여성들의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임의표집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혼관련 단체에 협조 의뢰하거나 주변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소개받는 눈덩이 조사를 사용하였다. 조사여건의 제약과 임의 표집의 방법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가 갖는 대표성이나 일반화의 문제는 본 연구의 고유한 한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넷째, 조사 시기는 2006년 8월 1일부터 31일 동안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2006년 3-4월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4-5월의 설문문항이 구성되었으며, 6-7월에는 구체적인 조사 설계와 최종 설문지 완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종 설문지의 구성 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7월 말 면접원의 교육과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8월에는 전문면접원에 의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9월에는 데이터 입력과 오류수정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9월 중순까지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분석이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입력오류에 대한 검증이 한 번 더 실시되었으며 10월 초까지 최종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상을 기반으로 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혼관련 단체에 협조를 의뢰하여 눈덩이 표집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는 가구소득에 따른 저소득층/중간층 각기 50:50의 할당 표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설계가 기획되었으나 최종 수집된 자료는 총 274부이다. 직업변동이나 이혼여성의 심리적 변화에 관한 분석에서는 비교적 이혼 후 시간경과에 따른 응답의 신뢰도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설문지 274부 모두가 최종분석에 사용될 것이다(IV장, V장, VII장). 그러나 VI장의 소득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이혼 이후의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소득에 관한 정확한 응답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혼 후 경과기간이 4년 이내인 사례 수만을 골라서 분석할 것이다. 그 결과, 이혼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적절한 22개의 사례를 제외하여 총 252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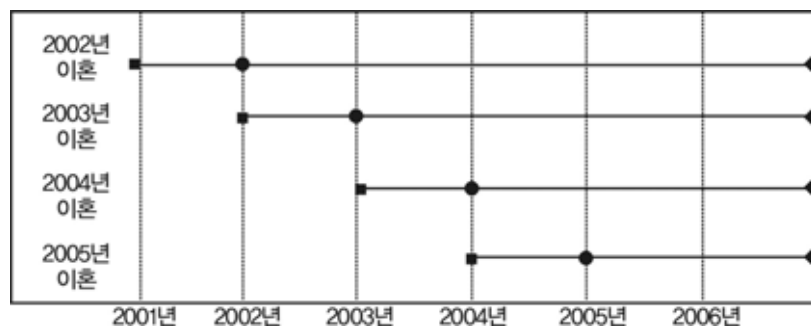
선정기준	특성
이혼연수 및 대상자 수	이혼 후 1년 이내: 50명
	이혼 후 2년 이내: 50명
	이혼 후 3년 이내: 50명
	이혼 후 3년 이상: 50명
대상자의 계층	저소득층 대 중산층: 50(총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 50(총가구소득 100만원 이상)
표집방법	이혼관련 단체에 협조 의뢰 및 눈덩이 조사
조사기간	2006년 8월 1일~31일
최종 분석사례 수	274부

나. 분석방법

[그림 1-1]은 본 연구가 평면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경험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의 시점을 그림으로 표기한 것이다. 분석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혼 시점을 전후하여 소득에 관한 시계열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만, 연구의도에 맞는 시계열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횡단적 조사에 의거한 회고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더욱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한 지 만 1년이 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¹⁾. 따라서 조사현실을 고려하여 이혼한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조사대상자를 포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혼 여성의 현재 소득에 대한 분석은 이혼 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 이혼 전후 소득파악 시점 지도

그 결과, 본 분석의 시점변화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에서 네모(■)는 이혼 1년 전을 의미하고, 동그라미(●)는 이혼 당시, 마름모(◆)는 이혼 후 가구소득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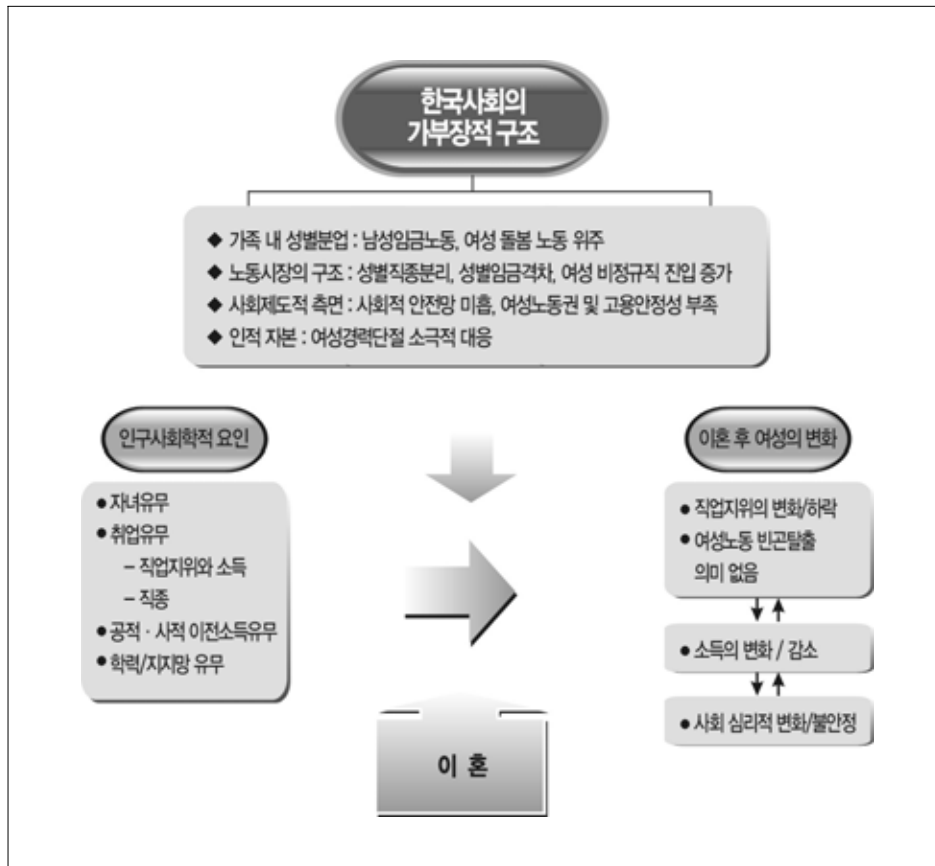
1) 결국 정확한 시계열적 정보는 패널 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패널자료도 1차년도에서 4차년도(2001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통해 이혼 또는 별거를 경험한 여성사례는 79사례에 불과했다. 현재 2005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면 사례 수는 늘어나겠지만 단순계산으로도 최대 160사례 안팎에 불과해 여전히 적절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없다. 특히 초기 패널자료의 소득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현재로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더 많이 쌓이면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기간이 길어 서로 다른 시점에 이혼을 경험한 사례를 비교한 분석결과에 대해 일반화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이혼한 사례에 대한 소득 파악 시점은 이혼 1년 전인 2004년, 이혼 당시인 2005년, 이혼 (1년)후 2006년이 된다. 2002년 이혼한 사례의 경우 소득 파악시점은 2001년, 2002년, 2006년이 된다. 그러므로 이혼 여성의 직업 및 계급지위는 물론 소득, 빈곤지위 및 심리정서적 변화는 모두 이혼 1년 전, 이혼당해연도와 이혼 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화여부와 정도를 살펴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윈도우용 SPSS 패키지 프로그램(ver 12.0)을 사용하였고, 통계방법으로는 주로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값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 및 일원변량분석 등의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위한 로지스틱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이같이 이혼한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본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소득수준 및 구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무엇보다 화폐로 파악되는 소득수준을 비교하는데 시점의 차이가 비교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비교할 때는 직접 화폐소득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득대비육구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화폐가구 소득을 직접 비교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대비육구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득대비육구비율은 당해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이다(소득대비육구비율 = 당해연도 가구소득/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소득대비육구비율은 소득시점의 (물가와 일부소득상승분이 반영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므로 비교 시점차이에 의한 소득수준비교의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만약 소득대비육구비율이 1.0이면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이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와 같다는 것이고, 1.5이면 최저생계비보다 1.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대비육구비율이 0.5이면 해당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50%에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III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림 1-2] 연구분석틀

5. 연구의 한계점

첫째,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은 임의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이혼여성에 대한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일정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혼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혼을 전후로 한 가구총소득 및 개인근로소득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의 비교변화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의 확보와 조사

설계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임의표집의 방식은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적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이혼한 여성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혼여성의 근로소득, 가구근로소득과 가구총소득 및 공·사적 이전소득이 시간이 경과함(이혼전과 이혼당시, 이혼 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야 하는 소득변화의 경우에는 이들의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응답결과의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회고적인 방법으로 인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본 연구의 고유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혼은 여성에게만 변화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삶을 변화시키는 생애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따라, 동일한 성간에도 직업적 지위 및 부양자녀의 유무에 따라 여건은 달라진다. 이러한 젠더간 비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이혼 후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종단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횡단적 연구방식에 의존하되 일부 횡단적 자료수집방식의 보완을 통해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향후 이혼에 관한 시계열적 자료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II

한국의 가족변화와 이혼

1. 가족의 구조변동과 이혼의 증가	7
2. 이혼의 유형과 특징	2
3. 이혼가족지원정책 현황	2

1. 가족의 구조변동과 이혼의 증가

한국 사회는 지난 40여년에 걸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해오면서 가족의 구조와 유형 및 기능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은 가족구조가 점차 단순해지고 규모가 축소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주의적 가치는 물론 양성평등한 가족구성원의 요구가 확대되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한편 가족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가족규범 및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내재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가족 구성원의 갈등 표출 또한 빈번해짐에 따라 가족해체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 가족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합계 출산율의 감소 등과 같은 인구학적 지표의 급속한 변동으로 가족형태가 지극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각 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의 비율이 '60년 25.8%에서 '00년도에는 8.4%, '05년도에는 7.0%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동일한 기간에 2세대 가구는 70.1%에서 '00년도 60.8%, '05년도 55.4%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1세대 가구는 6.7%에서 14.2%, 16.3%로 증가하고, 1인 가구는 '80년 4.8%, '00년 5.0%, '05년 6.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확대가족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로 가족규모도 점차 감소하여 평균 가구원 수는 '60년 5.5명에서 '00년 3.1명, '05년 현재 2.9명으로 소수화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통계청, 각년도).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족 유형의 변화에서도 확인되는 바, 가부장적 직계가족에서 부부중심 핵가족으로의 변화, 홀벌이 가족 외에 맞벌이부부가족의 증가, 주말부부가족, 직업을 갖고 자녀를 갖지 않는 1세대 가족(DINK) 및 연상이나 동갑 여성과의 결혼형태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포함하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구, 미혼단독가구, 소년소녀가장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커플 등이 등장하는 바야흐로 후기 근대적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변화를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다양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예컨대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여겨졌던 경제적 기능, 출산기능, 자녀양육과 사

회화 기능, 정서적 기능, 여가기능 등이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축소되거나 일부 확대 재편되고 있다. 흔히 가족 내 복지 기능, 경제적 생산등과 같은 기능은 상실 또는 약화되고 소비기능, 자녀의 사회화, 정서적 만족 등과 같은 기능은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권, 1998).

<표 II-1>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수 추이

(단위: 명, %)

	1960	1980	2000	2005
평균가구원 수(명)	5.5	4.5	3.1	2.9
1인가구		4.8	5.0	6.9
1세대가구	6.7	8.3	14.2	16.3
2세대가구	70.1	68.5	60.8	55.4
3세대이상 가구	25.8	17.0	8.4	7.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각 년도

이렇듯 한국의 가족은 많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낮은 혼인율과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이다. <표 II-2>에 제시하였듯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4년 조혼인율(6.4건)은 9년 전인 1995년의 8.7건보다 2.3건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부터 꾸준히 6.4건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004년 혼인수가 2003년에 비해 6,012쌍이 증가하였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는 재혼이 많이 늘고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통계청, 2005; 김미숙 외, 2005). 혼인율과는 달리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가, 2004년 조이혼율 3.5건, 2005년 2.6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의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청이나 전문가들도 아직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겠다.

당해 연도 결혼 대비 이혼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3.9%에서 2003년에는 54.8%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결혼한 부부의 반이 이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법원행정처는

적절한 이혼율 산정방식으로 특정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로 나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법원행정처, 2004),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2002년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9.3%에 불과하여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 된다(결혼 대비 이혼율:44%).

<표 II-2>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단위: 건, %)

	연도결혼수	이혼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결혼대비 이혼율
1970	295,137	11,615	9.2	0.4	3.9
1975	283,226	16,453	8.0	0.5	5.8
1980	403,031	23,662	10.6	0.6	5.8
1985	376,847	38,838	9.2	1.0	10.3
1990	399,312	45,694	9.3	1.1	10.8
1995	398,484	68,279	8.7	1.5	17.1
1996	434,911	79,895	9.4	1.7	18.0
1997	388,591	91,159	8.4	2.0	23.4
1998	375,616	116,727	8.0	2.5	31.1
1999	362,673	118,014	7.7	2.5	32.5
2000	334,030	119,928	7.0	2.5	35.9
2001	320,063	135,000	6.7	2.8	42.2
2002	306,573	135,014	6.4	3.0	44.0
2003	304,932	167,095	6.4	3.5	54.8
2004	310,944	139,365	6.4	2.9	44.8
2005	316,375	128,468	6.5	2.6	40.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2004년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이혼율의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다음 <표 II-3>에 제시되었듯이 2002년도의 OECD국가 중 벨기에의 이혼율은 2.96건, 덴마크 2.85건, 독일 2.4건, 프랑스 2.0건, 네덜란드 2.1건, 영국 2.6건등으로 우리나라의 2000년도 이혼율 2.5건과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견상으로만 본다면, OECD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통한 가

죽 및 개인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이혼율과 산업화 후발국인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되어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OECD 국가들은 한국사회에 비해 동거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결혼과 동거혼의 실질적 차이를 무화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이혼율만의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혼전 동거율에서 호주의 혼전동거율(73.1%)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통계는 계산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사회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의 혼인율이 낮음 또한 이러한 단순비교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국의 동거율 비교와 이에 따른 해체율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표 II-3> 주요 OECD 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2001~2005)

(단위: 건)

국가	시점	조혼인율 (천명당)	조이혼율 (천명당)	결혼연령 (여)-나이	결혼연령 (남)-나이
한국	2002	6.4	3.0	27.0	29.6
	2005	6.5	2.6	27.7	30.9
호주	2002	5.4	2.7	24.2	26.7
	2004	5.5	2.6	24.6	27.1
오스트리아	2002	4.5	2.4	27.4	29.9
벨기에	2002	3.9	3.0	26.7	28.9
덴마크	2002	6.9	2.9	29.6	31.9
핀란드	2002	5.2	2.6	28.5	30.4
프랑스	2002	4.7	2.0	28.3	30.4
독일	2001	4.7	2.4	27.2	29.8
	2002	4.8	-	-	-
그리스	2001	5.8	1.0	-	-
	2002	-	-	27.3	31.0
이탈리아	2001	4.8	0.7	-	-
	2002	4.6	-	-	-
네덜란드	2002	5.3	2.1	28.2	30.7
스웨덴	2002	4.3	2.4	30.1	32.5
영국	2000	5.1	2.6	27.2	29.3
일본	2002	5.9	2.3	27.6	29.4
노르웨이	2002	5.3	2.3	28.6	30.9

자료: 각국 통계청(2006).

2. 이혼의 유형과 특징

한국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혼의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혼자들의 성, 연령, 동거기간, 자녀유무 등의 특징을 간과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사회는 결혼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결혼을 지체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4세, 여성은 25.4세이었는데 2000년에는 남녀 각 29.3세, 26.5세로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남성 30.9세와 여성 27.7세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표 II-4>.

<표 II-4>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연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28.4	28.9	29.1	29.3	29.6	29.8	30.1	30.6	30.9
여성	25.4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인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1970년 1.4%에 불과한 30세-34세 여성의 미혼율이 2000년에는 10.7%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의 경우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변화순, 2002). 이는 「2003년 전국가족조사」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에 20대 남성의 61.8%, 여성의 54.1%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20대의 58%, 30대는 63%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연령이 낮은 층이 높은 연령층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 혼인연령의 상승은 평균 이혼연령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에는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이 36.8세, 여성 32.7세이었는데, 1998년에는 남성 39.8세, 여성 36.1세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남성 40.1세, 여성 36.6세, 2005년 남성 42.1세, 여성 38.6세로 나타나고 있다<표II-5>.

<표 II-5> 평균 이혼 연령

(단위: 세)

연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36.8	38.3	39.8	40.0	40.1	40.2	40.6	41.3	41.8	42.1
여성	32.7	34.5	36.1	36.4	36.6	36.7	37.1	37.9	38.3	38.6
차이	4.1	3.8	3.7	3.6	3.5	3.5	3.5	3.4	3.5	3.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이혼한 사람들을 동거기간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거기간 0~4년의 집단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가족주기 상 결혼 초에 해당하는 가족형성기이다<표 II-6>. 결혼하기 전까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제도적 평등을 강조하는 제도권 교육에 익숙한 개인들이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상호구속적인 결혼관계의 부적응이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 가운데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족주의적 가치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규범의식이 강했던 과거에는 개인적 희생이나 인내를 감수하면서도 결혼과 가족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혼을 대안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이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 증가로서, 1990년 5.0%에서 2000년 14.3%로 대폭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계속 증가하여 18.3%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15~19년간의 동거한 경우의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7.9%에서 2000년 14.3%, 2004년 18.3%를 보이고 있다. 1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중년 및 노년층의 이혼율 증가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1990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여성들이 자녀와 재산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불행한 결혼을 종식시키기 위한 시도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98년 IMF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한 가족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족불화가 급증하면서 이혼율

또한 급증하는 가운데 황혼이혼 역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II-6> 동거기간별 이혼율

(단위: 세)

동거기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4년	39.5	32.6	29.4	29.2	29.3	28.2	26.9	24.6	25.2	25.9
5-9년	29.1	25.1	23.3	22.8	22.3	23.0	23.2	23.1	22.9	22.2
10-14년	18.2	20.6	19.2	18.9	18.7	19.0	19.4	19.6	18.9	18.4
15-19년	7.9	13.1	15.5	15.6	15.3	14.8	14.7	14.9	14.7	14.8
20년이상	5.3	8.2	12.4	13.5	14.3	14.9	15.7	17.8	18.3	1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동거기간은 자연스럽게 자녀연령과 자녀수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율 증가는 곧 유자녀 부부의 이혼율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율은 1990년 65.6%, 1995년 71.4%로 증가하다 2000년 70.4%로 2004년 65.5%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자녀 이혼율은 높으며 이는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위의 동거기간별 자녀의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당시 자녀가 학령기인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통계청(2001)자료에 의하면, 전 학령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혼하는 비율이 이혼전수의 43.2%에 이르며 청소년기는 14.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에서 1990년 7.8%로 감소하였다가 1995년 8.6%, 2000년 9.4%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현재 한부모 가구 가운데 80.4%가 편모가구로 여성 한부모 가족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즉, 이혼자들의 대부분 자녀 양육은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부모 가구의 경제권이 여성의 책임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2001)에 의하면 일반가정도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성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교육비 부담이 더 심각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에 응답한 사람 중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11.5%만이 긍정의 답을 하고 있어 전배우자의 양육비지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변화순, 2003).

<표 II-7> 한부모가구비율

(단위: 1,000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 가구수					한부모 가구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85	9,571	254 (30.0)	443 (52.2)	50 (5.9)	101 (11.9)	848(100.0)	8.9
1990	11,355	227 (25.5)	498 (56.0)	79 (8.9)	85 (9.6)	889(100.0)	7.8
1995	12,958	216 (22.5)	526 (54.8)	124 (12.9)	94 (9.8)	960(100.0) 편모:788 편부:172	8.6 편모:82.1 편부:17.9
2000	14,312	252 (22.5)	502 (44.7)	245 (21.9)	122 (10.9)	1,124(100.0) 편모:904 편부:220	9.4 편모:80.4 편부:19.6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편, 이혼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통계청, 2001)에 이혼의 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부불화의 문제였다.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일 큰 사유가 되고 있으며, 반면 최근에 와서는 경제문제와 기타의 범주에 의한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부터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까지 영향을 끼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부불화가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은기수, 2002).

<표 II-8> 이혼사유별 이혼율

(단위: %)

이혼사유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포함)	84.9	83.0	80.7	80.2	74.4	74.0	72.5	69.9	70.6	70.7
경제문제	2.0	2.9	6.6	7.0	10.7	11.6	13.6	16.4	14.7	14.9
건강문제	1.5	1.0	0.9	0.9	0.9	0.7	0.6	0.6	0.6	0.6
기타	11.6	13.1	11.8	11.9	14.0	13.7	13.3	13.1	14.1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90년 자료-통계청, 「2001 혼인·이혼통계결과」, 2002.

자료 :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3.

부부불화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표 II-9>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장 많은 이유는 ‘성격차이’로 2000년부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 다음이 가족불화인데, 이는 2000년 21.9%에서 2005년 9.5%로 12.4%포인트 감소하였다. 공정자 외(2005)는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격차이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들은 부부간의 단순한 각자 성격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가족문화의 차이, 성격특성에 따른 부조화, 성생활 문제, 경제운용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II-9> 부부불화의 세부항목 구성 비율

(단위: %)

부부불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배우자 부정	8.1	8.7	8.6	7.3	7.0	7.6
정신·육체적 학대	4.3	4.7	4.8	4.3	4.2	4.4
가족간 불화	21.9	17.6	14.4	13.0	10.0	9.5
성격차이	40.1	43.0	44.7	45.3	49.4	49.2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3.

기타의 범주를 고려해 보면 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들이 다양함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부부불화와 경제문제는 상호 관련되어 발생되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2).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근래의 이혼은 다양하고 질적으로 상이한 성향이 증가함을 보여주는데, 월급을 안주거나 때리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일삼는 등 남편으로서의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성적 갈등 등 재판을 통해서가 아닌 협의 이혼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이혼 사유가 더해진 것을 볼 때 이혼율은 어떠한 범주에서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결혼을 소멸시키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혼종류별 이혼 건수에 있어서는 1993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협의이혼이 대부분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재판이혼은 20%미만을 보이고 있다<표 II-10>. 협의 이혼은 현재 이혼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정에 휩싸여서 철저한 이혼에 대한 숙고 없이 이혼절차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장혜경·민가영, 2002). 이에 따라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부부들에게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혼 취하율이 평균 9.99%로 추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유계숙, 2006).

<표 II-10> 협의 및 재판이혼 건수와 비율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협의이혼	73.9	73.9	79.2	80.6	81.0	83.6	83.8	83.5	82.7
재판이혼	19.6	19.9	19.1	18.5	18.5	16.3	16.0	16.0	16.8
미상	6.5	0.8	1.7	0.8	0.5	0.1	0.2	0.4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2001혼인, 이혼통계결과」, 2002

3. 이혼가족지원정책 현황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세를 보여준 바 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의 급증 추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대내외적 변화와 가족가치 및 의식의 변화 등에 미루어 볼 때 이혼율의 감소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가족,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관계 해체로 인한 이혼 한부모가 증가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 정서적, 자녀양육형태 및 주거방식 등의 변화와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혼 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최근 들어 이혼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구의 빈곤 유입가능성과 대물림 등이 주요 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이들에 대한 경제 및 자녀양육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의 방식과 범위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혼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및 자녀양육지원정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혼가족이 지원대상이 될 경우는 먼저 이혼가족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여 자녀양육, 교육 및 주거지원을 지원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 역시 모·부자가족의 하위 범주로서 이혼가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법적 차원에서는 민법의 가족법 중 이혼관련조항, 호주제 폐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이혼가족 지원관련 규정이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이혼가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정책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²⁾.

사회성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가운데 이혼가족에 대한

2) 이혼가족에 대한 자세한 지원정책의 내용이나 해외정책사례는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를 참조할 것.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사업에 의거한 것으로 주로 생계지원, 자활지원, 자녀양육비지원,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는 최저생계비라는 제한적인 수급자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지원 가능한 반면, 이혼가족의 자녀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만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이혼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지원,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 가운데 이혼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 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를 참조로 살펴본다면 모자가족의 경우 43.7%, 부자가족의 경우 60.9%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6).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넘나드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하고, 특히 수급기준에 미치지 않는 여성이혼가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적 어려움³⁾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01).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들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2002년 12월에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유자

3) 공공부조 수급자는 2003년 현재 총 83,794세대인데 한부모가구는 이 중에서 79.5%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계산한 수치임).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은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2001년 현재 전체여성취업자 913만명(100%)가운데 가구주인 여성은 222만명(24.3%)이며, 여성가가구주 가운데 항상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 약 43.7%나 된다(금재호, 2001). 반면 남성가가구주 가운데 항상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중은 13.6%이며 여성가가구의 항상 빈곤(permanent poverty)은 남성가가구의 항상 빈곤보다 약 3배 이상 많다.

녀 이혼가족에만 해당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06)⁴⁾. 2006년 현재 모·부자가정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의 월소득이 152만원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등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표 II-10> 참조). 「모·부자복지법」의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비교해서 약간 상회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은 939,849원(보건복지부, 2006)인 반면 「모·부자복지법」의 월소득기준은 1,220,000원 이하이다. 이를 최저생계비에 대비해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30% 미만 수준의 계층에 대한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다.⁵⁾

<표 II-11> 2006년 모·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1만원 이하	122만원 이하	152만원 이하	176만원 이하	201만원 이하

주: 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5만원씩 증가

자료: 여성가족부,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6

한편 모·부자 중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모자보호시설(일명 모자원)에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에 한해서 생계급여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한시적이라 함은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 동안 기거(2년 연장가능)가 가능하여, 이 기간 동안에만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시설 거주가족의 생계급여 지급 수준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한다(여성가족부, 2006). 그러나 대부분의 모·부자복지사업 대상은 시설거주자가 아니라 재가이혼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 외의 모·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4) 여기서 명시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모·부자복지법」은 이혼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5)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가구를 말하고 차차상위계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말한다. 따라서 모·부자가정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사이에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박영미, 2004). 예컨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주요 법적대상으로 보는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약 57천 가구이며, 이는 전체 모부자가구(1,247 천 가구)의 4.5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포함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06; 송다영, 2006:46). 이러한 지적은 곧 「모·부자복지법」이 부실하여 이들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최근 들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혼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 또한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주대상은 재가 저소득 모·부와 모자보호시설 거주자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가계보조수당을 노동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은 직업훈련이수자에게 제공되고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지원책이다(「모·부자복지법」 제15조). 그러나 모·부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동안의 낮은 생계비 지원으로 참여자가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⁶⁾.

끝으로 이혼한 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방안으로는 이들에 대한 양육비와 학비지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육과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지원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 수업료)⁷⁾ 및 양육비 지원(6세미만 아동, 월 5만원)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는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받

6) 예컨대 노동부 실시 여성가장직업훈련비는 최대 41만원, 하루 4시간, 한달 80시간 이상일 경우 교통비 5만원, 가족수당(자녀 1인당 5만원, 가계보조 15만원 지급)이며, 지차체 실시 고용촉진훈련 참가시 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

7)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여성가족부, 2005).

는다. 모·부자복지 대상 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지된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 현재 1인당 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06).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현실적인 양육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며,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 대학등록금이나 학자금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대학생 자녀들 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송다영, 2006; 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

그 밖에 모·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이용 시 보육료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으며, 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a).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시설보호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 실태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6).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 규모별로 정액급여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합하여 현금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가 법령규정과 운영 현황 간의 괴리가 있고, 급여체계가 한계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태진, 2005). 또한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된 영구임대주택 공급지원은 현재 중단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공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지만,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2년에 연장 2회(2년 단위)로 최장 6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서 저소득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서는 영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

끝으로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모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미만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 거주자에게는 생계비지원, 학비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복지자금 융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가 지원되며, 통합관리운영비, 학용품비, 부교재, 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⁸⁾ 등도 지급된다. 그러나 모자복지시설은 광역시나 지자체에 1~2개 정도에 불과하며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은 시설이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12월 현재 전국의 모자보호시설은 40개소로 1,086세대가 보호받고 있으며, 모자자립시설은 전국 4개소 60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과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도, 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⁹⁾ 그러나 모자자립시설은 전국에 4개뿐이어서 모자보호시설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는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으로는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다(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

8) 아동 급식비는 미취학 유아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하루 600원 꼴이며, 중·고등학생의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하루 600원씩 한달 평균 24일치의 금액이 지급되고, 연중 학용품비(초등학생 16,000원, 중학생 27,000원, 고등학생 28,500원)가 지급되고 있다(서울시, 2001).

9) 시설보호 모자가정이 제공받는 보호내용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등이다.

III

이론적 배경

1. 기존연구 동향	3
2.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요인	42
3. 이혼의 심리사회적 결과	3

1. 기존연구 동향

일찍이 가족해체 등의 가족변화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이혼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자녀가 있는 여성한부모의 생활실태와 이들 자녀에 대한 복지문제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스타렐(Starrels, 1994)은 편모가구의 증가를 미국의 여성빈곤 증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생활능력을 제약하는 사회에서는 이혼율의 증가와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기대수명은 여성의 빈곤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았다(Starrels, 1994; 유정원, 2000). 동시에 이들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빈곤과 적절치 못한 자녀의 양육환경은 빈곤의 세습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주요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이혼이라는 결혼관계의 해체를 통해 여성이 심각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몇몇의 연구들이 있다.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를 연구한 결과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여 적게는 6%에서 많게는 70%까지의 소득수준의 하락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이혼 후 여성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호프만(Hoffman, 1977)의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감소를 대략 6%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와이츠만(Weitzman, 1977)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혼 후 여성의 평균 생활수준은 73% 감소하는데 비해 남성은 42%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후 방법론적 엄격성을 더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들은 이혼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감소는 30% 가량이라고 수정 발표한 바 있다¹⁰⁾(Hoffman, 1977; Weitzman, 1977; 윤홍식, 2003:55에서 재인용).

한편, 인종의 차이를 고려한 던컨과 호프만(Duncan & Hoffman, 1985)의 연구에

10) 이에 대해 Peterson은 Weitzman의 연구는 표본 및 척도 및 데이터의 결함 등에 의해 과대 추정되었다고 보고, Weitzman의 “The Divorce Revolution”의 동일한 표본과 경제적 안정감을 재분석한 결과 이혼 후 여성의 생활수준은 27% 감소, 남성의 생활수준은 10%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Peterson, 1977).

서는 소득-욕구비율¹¹⁾이 백인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11%,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혼 전후의 여성 소득을 비교함에 있어 이혼당해연도를 포함시킴으로서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²⁾.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혼전과 2년 후 소득욕구비율을 비교한 스티어링(Stirling, 1989)의 연구결과는 이혼 2년 후 소득-욕구비율은 약 3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결혼해체(합법적인 별거를 포함해서) 삼 개월 전에 13%에서 결혼 해체 후 33%로 증가하여 무려 빈곤율의 증가 정도는 무려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 Lee, 2002; 윤홍식, 2003).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서구의 경우 이혼 및 별거를 전후한 여성한부모 가구의 공공부조 수급율의 변화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McLanahan & Thomsom, 1998; Peterson, 1996; Hoffman, 1977). 대체로 이들은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비교에서 더 나아가 가족해체를 전후 한 여성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예컨대 미국에서 1996년 복지개혁입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여성 한부모 가구의 복지의존성을 고용증대를 통해 줄여나가는 것일 만큼 가족해체 이후 저소득 이혼여성가구에서는 공적소득이 주요한 수입원이기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의 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나 가구에서는 소득의 감소정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원천과 구성 비율 또한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테크만과 패쉬(Teachman & Paasch, 1994)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해체 이전에는 공공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이용하는 비율이 약 9%에서 해체 후에는 18%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해체 전에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가구소득의 18%에서 가족해체 이후에는 30%로 그 비중이 증가될 만큼 공공부조는 여성한부모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보

11) 소득-욕구비율(income-to needs ratio)은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미국의 공식빈곤선으로 나눈 값이다(윤홍식, 2003).

12) 예컨대 2000년도 8월에 이혼했을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수준을 이혼이후의 소득으로 측정함으로써 실제로는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혼전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준 바 있다. 또한 이혼여성의 가구소득에는 이들의 근로소득이나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이혼한 전배우자나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소득의 이전여부 및 그 비중도 소득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동을 혼자서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전배우자의 양육비의 지원은 주요한 가계소득원이 되기도 한다. 가핑클과 맥라나한, 왓슨(Gafinkle, McLanahan and Watson, 1989)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양육비는 여성한부모 가구총소득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38%까지 높아져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윤홍식, 2003:55-56).

그러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여성을 집중 배치하는 노동시장의 성 차별이 견고하고 전 배우자로부터의 자녀 양육비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이혼여성의 자녀 양육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 비해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및 빈곤실태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보편적인 복지인프라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단히 미비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이혼자녀들의 양육과 사회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요행히 국민의 정부 이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인프라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실태파악에 집중되어온 그간의 연구들은 보다 진전된 연구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90년 후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연구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거시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들의 빈곤실태와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결혼관계의 유형에 따라 여성가구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가구주 집단과 일반가구 혹은 부가가구와의 소득비교를 통해 이들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도시가계연보 및 도시빈곤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인구의 2/3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이해경(1997, 1998)의 연구 이래 대부분의 여성빈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빈곤가구주의 성별 비교를 통해 여성가구주의 발생요인은 다르지만 여성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구를 대표하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규모를 추산함으로써 ‘빈곤의 여성화’ 경향¹³⁾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한부모가 여성빈곤의 핵심층임을 보여주고 있다(김혜영, 2005 :12).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이들의 취업 혹은 근로소득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의 변화보다는 남성과의 결혼관계가 매개되지 않는 여성들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가 강조되고 있을 뿐, 여성가구주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배우자와의 사별, 별거, 이혼 혹은 배우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구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등과 같은 여성집단 내의 차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Casper, L. M., MacLanahan, S. S. and Garfinkle(1994); 변화순 외, 2002; 여지영, 2002; 박재규, 2003;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전히 배우자의 사별은 여성가구주 형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사회 역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량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별 요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이들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온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가 사실상 그들 간의

13)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밝히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빈곤집단에서 남녀의 성을 구분하여 빈곤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빈곤여성에 대한 모집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가구단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빈곤가구의 비율을 측정한 뒤에, 빈곤가구를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하여 빈곤비율을 분석함으로써 남성가구주빈곤과 여성가구주의 빈곤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빈곤가구의 가구주 성별비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빈곤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여성가구주 가구 가운데 빈곤가구의 비율을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여지영, 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2, 송호근, 2002; 한국여성개발원, 2003).

14) 이혼율의 급증과 1인가구의 점진적인 증가는 여성가구주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1970년 전체 가구의 12.8%를 차지하던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8.5%, 2004년 현재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전체 가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2; 2004).

이질적 속성, 예컨대 여성가구주 가구의 형성유형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한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가계수입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구원이 제한된 가계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가구의 경제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윤홍식, 2004:9).

뿐만 아니라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의 소득수준 변화에 대한 추적 연구도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용할만한 종단적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양부모가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본 문현숙과 김득성의 연구(2000)는 불과 13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혼여성의 62%에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체가족유형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조사한 김승권, 이태진, 김유경, 송수진(2001)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한부모 가족의 약 71%가 가족해체이후 경제생활이 매우 혹은 약간 나빠졌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결혼관계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소득수준을 분석한 윤홍식의 연구(2004)의 경우는 제 4차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이용함으로써 그동안 제한적 표본 수만을 확보한 개별 연구에 비해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결혼관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제 4차연도 자료에서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1차년도 부터 조사된 10,914명과 2001년에 새로 추가된 249명 가운데 2001년 결혼상태가 별거, 이혼, 사별인 여성과 연령이 65세 이하의 비노인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사별 233 사례, 이혼과 별거 79사례로 총 312 사례를 추출하여 이들의 결혼해체 이후 이들이 경험한 소득수준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결혼관계의 해체 유형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사적 소득이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의 구체적인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결혼해체유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있음에도 이혼과 별거사례는 79사례에 불과하고, 사별과 이혼 및 별거에 따른 소득수준변화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결혼관계 변화를 전후로 한 소득변화의 추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 접근 가능한 종단적 자료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현실적 여건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족해체를 전후로 한 여성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여전히 향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혼전후의 소득을 비교하는 유일한 연구로는 역시 1998년부터 2003까지 총 5년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 및 별거상태에 이른 161명을 추출하여 이혼 1-2년 전의 이혼자가 속한 가족의 총소득과 이혼 1-2년 후 이혼자가 속한 가족의 총소득을 비교한 김미숙 외(2005)의 연구가 있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이혼가족의 이혼 전후한 소득변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혼가족의 소득이 이혼하기 전의 가족에 비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혼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 이혼 후 소득에서 남녀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가족의 소득구성을 이혼을 전후로 비교분석한 결과, 남성이혼가족의 경우 이전소득은 이혼 전 6.6%에서 11.9%로 상승하는데 비해 여성이혼가족에서는 3.3%에서 12.6%로 약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200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순 가구소득의 평균비교일 뿐 가구원 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구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이혼 여성의 가구 소득구성에서 공공 부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여성의 소득구성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최근에 와서야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구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이혼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인숙(1998)으로부터 일부 확인되지만, 이는 가구구성의 변화를 전후로 한 비교도 아니며 이전소득의 원천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의 49%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직업을 갖지 못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총소득 가운데 이전소득의 비중은 87.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영란과 강철희(1999)의 연구결과 역시 정부로부터 공적으로 지원받는 소득이 이들 가구소득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윤홍식(2004)의 연구에서는 공적이전 및 사적소득이전이 소득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별거와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가구의 경우 공적소득이전은 0.3%, 사적소득이전은 5.4%, 사별가구에서는 공적이전이 2.1%, 사적이전소득이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여성들이 복지 의존을 심화시킨다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여성 한부모가족의 소득구성에서 자산들의 근로소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경우에는 공적지원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미미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빈곤실태와 요인을 분석한 윤홍식, 김혜영, 이은주(2005)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소득이전은 13.7%, 사적소득지원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구성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연구관심의 차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연구의 주요대상이 여성가구주 전체인지 저소득층이나 혹은 절대빈곤층에 국한된 것인지에 따라 공·사적 소득이전의 액수나 범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결과의 단순대비는 무의미하다. 다만 이들 여성의 소득구성의 비율과 사적소득지원 및 공적지원의 상대적 비중 등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존연구의 동향과 연구결과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만큼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이혼이 결과적으로 이혼여성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과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종사상의 낮은 지위와 불안정성, 만성적인 저임금 등으로 일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한국사회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

에서 이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혼한 여성들의 직업 및 소득변화에 관한 연구는 시계열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패널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성의 패널 데이터는 대단히 부족하다.

2.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요인

전통적인 친족체계와 지역사회의 심리적 안전망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사랑과 결혼은 전통과 종교가 제공하던 삶의 가치와 규준, 혹은 자기정체성의 주요 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백, 백-계륜샤임, 1999).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은 가족구성과 유대의 토대인 사랑의 가변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형성의 주요 근거이자 토대인 사랑의 소실은 바로 가족의 해체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삶의 질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가용할만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개인 삶의 기준과 방식이 자신의 내면화된 준거체제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귀속시키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또한 더욱 확장되고 있다(김혜경, 2001; 김혜영, 2005:20).

한국가족은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혼의 증가는 상당히 주목할 만 특징적인 가족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관계의 변화가 갖는 여성복지적 함의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이혼이 갖는 성별 함의는 결코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빈곤의 연구자들은 여성빈곤은 이혼과 별개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빈곤가구를 분석하였던 피터슨(Peterson, 1987)과 로저스(Rodgers, 1996)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설명한 바 있다¹⁵⁾. 한국사회의 역시 IMF 직후 실업자 가구조사를 통해 여성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부양자 가족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결론이 잇따라

15) 미국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1959년 9.4%에서 1970년 12.8%, 1980년 19.2%, 1993년 24.0%로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출되면서 여성가구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바 있다 (김승권 외, 1998, 박경숙, 1999; 김경희, 2001; 정미숙, 2001; 김혜영, 2005).

9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어 남성생계부양자와 매개되지 않는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의식의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독립과 가족구성 선택권을 확장시키고 있지만, 정작 가족 내 성별분업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은 돌봄 노동의 전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시장의 진입부터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관계의 해체를 통해 완전한 생계부양자로 홀로 서게 되는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대부분은 곧 잠재적인 빈곤집단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의 혹은 타의로 부양자의 위치를 부여받게 되지만,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일하는 어머니로서의 갈등과 고뇌를 동시에 혼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국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김혜영, 2005:18).

물론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을 바라보는 특정 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함께 개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은 이혼이라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연령과 직업경력, 물론 신체적인 건강과 학력, 뿐만 아니라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망은 결혼관계의 해체라는 생애사적 사건의 대처방식과 능력의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여성의 직업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은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개별여성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본조차도 사회적인 발현 가능성의 상당부분이 구조적인 조건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건지우는 구조적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가.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여성노동

현대 한국가족은 가족구성에 있어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증가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 문화가 보편화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핵가족 가치는 여전히 남성의 임금노동과 여성의 감정노동이라는 성별분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곧 가족의 젠더관계 역시 경제부양자인 남편과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역할을 맡은 아내의 성역할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화된 가족주의와 남성부양 가족체계는 결과적으로 여성노동력의 가치실현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와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들의 높은 성취욕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생존의 한 방안으로 선택하게 하는 가족의 존 전략을 여성개인에게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박혜경, 1993). 그리고 결혼을 통과의로 인식해온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의 인적자본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본을 소유한 여성들조차 결혼과 사회적 노동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시장화, 상품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별분업체계에 의존하는 남성부양자 가족 모형은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무급화 시키는 물론 여성노동의 산물을 전유하고 여성노동력의 상품화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여성의 잠재적 빈곤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Sommestad, 1998; 김혜영, 2004).

사실상,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인부양, 양육 등의 돌봄 노동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의 양립이 가지는 갈등적 조건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여성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여성노동공급의

단절성이나 비정규직화와 같은 현상들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들의 노동경력은 가족주기와 직결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자녀출산과 자녀양육기의 노동단절 현상이 그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기 양육기인 25세-34세에 가장 낮다는 점에서 한국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여성노동력의 공급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는 생애사건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가족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경제행위자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유급노동으로부터의 배제, 그로 인한 인적자본의 열세, 취업경력의 부재 등은 남성부양가족의 해체 시 경제적 독립자로 쉽게 전환될 수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위하락, 나아가 빈곤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Morgan 1991; Blau & Ferber, 1989). 특히 고학력의 전일제 취업남성과 결혼한 화이트칼라 여성들은 이혼 후 경제적 하락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경험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여성의 의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여지영, 2002; 윤홍식, 2003)¹⁶⁾. 이혼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은 무엇보다 가사노동, 자녀양육과 노인보호 등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노동시장의 참여한 여성일지라도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여성의 특수성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취업경력 단축과 소득능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¹⁷⁾.

16) 예컨대 발트포겔(Waldfoegel, 1998a; 1998b)의 연구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은 남성소득의 73%, 무자녀 여성은 남성의 90%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성별 격차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가족특성에 의한 소득격차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남성부양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Christopher, 2000; Folk, 1996; Holden and Smock, 1991; McLanhan et al. 1989).

17) 이런 점에서 리스터(Lister)는 가족과 결혼에 관계없이 보호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가 하는 면에서 ‘탈가족화’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는 개별 성인들은 가족관계와는 무관하게 유급노동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권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있다. 유사하게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on, 1999)역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이 상품화되기 이전의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들은 시장의존성이 아니라 가족의존성의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독립에는 복지국가의 ‘탈가족화(defamilializing)’ 즉 개인의 가족의존도를 줄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은 개인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독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이들이 독립가구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원이 확보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독립된 생계부양자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진출입이 반복됨으로써 직종과 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되기 위한 노동시장참여(상품화)의 전제조건은 가족 내에서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돌봄노동의 탈가족화)이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에 대한 정책은 전통적인 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곧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구축의 핵심적 정책인 것이다¹⁸⁾.

더구나 우리사회와 같이 남녀 차별이 큰 사회에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은 주로 남성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관계는 곧 여성의 경제사회적 자원의 접근 통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결혼관계의 해체는 단순히 정서적, 애정적 파트너와의 결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부양자의 상실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Duncan & Hoffman, 1985; Smock, 1993; 윤홍식, 2003b, 2004). 그러나 결혼해체가 여성의 소득수준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절대빈곤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해체와 함께 일정정도의 소득감소를 경험하지만, 결혼해체 전 가구소득 수준이나 이혼 여성이 소유한 다양한 인적,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에 따라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지위변화정도는 각기

이는 정책, 가족이나 결혼의 상호의무관계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올로프(Orloff, 1993) 또한 여성이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정도가 여성의 복지지표로 중요함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통한 특정 가족으로의 편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시스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18) 실제로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의 일과 가족 양립정책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은 단순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를 넘어 해당 가구(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05).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 노동시장의 구조

여성의식이 변화하고 교육수준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취업은 결혼 전에 잠시 거쳐 가는 과도기적 통로가 아니라 전 생애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취업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수용되는 방식은 여전히 모순적이다. 교육기회의 증가와 가족의 구조변동으로 인한 여성취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노동은 남성과는 구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왜곡되어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여성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와 학력이라는 상징적 자본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남성들과 대등한 정도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김혜영, 2004).

실제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조차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10%이하인 직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리는 강하게 남아있다(진미석 외, 2003). 특히 경제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은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장지연, 2001; 정이환, 2002).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여성노동자의 44.7%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까지 고려한다면 여성노동자의 81.3%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노동부, 2003). 소위 여성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여성직종’은 저연령, 저임금, 짧은 근속연수, 소규모 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결혼지위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함께 이로 인해 여성들은 시장에서 완전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혼 이후 현격하게 변화되는 여성들의 일, 가족경험으로 인해 기혼여성들은 종종 ‘직업의식’이 부재 혹은 결핍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

써 노동시장에서 외면 받게 된다. 즉 노동시장은 성별로 구획되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다시 혼인 지위에 따라 ‘기혼’, ‘미혼’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혼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우선적인 가족책임자로 규정하는 ‘특별한’ 범주의 여성노동자로 재분류되고 있는 것이다(박홍주, 이은아, 2004).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들은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가족주기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시장의 진출입이 결정되는 여성들의 분절적인 노동시장참여는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경력의 주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는 결혼이나 자녀출산, 양육과 같은 가족주기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직업경력을 우선적으로 조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순환적 과정에 놓여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의 부양자 지위에서 파생된 지위만을 부여하거나 보조적이고 2차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만을 부여받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혼 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개인의 직업적 능력과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성개인의 인적자본의 활용가능성은 특정 사회의 여성노동에 대한 가부장적 시장평가에 의해 구조화 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회제도적 측면

이혼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혼율 상승 자체에 있기보다는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증가에 따른 대응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관계 내에서 보살핌 제공자의 주체였던 여성과 아동들을 어떻게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와 연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여성한부모 가구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현재 한국 복지체제 내에서는 적절한 고민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먼저 여성한부모 가구의 빈곤문제를 보면 이혼 또는 별거를 경험한 여성이 있는 가구의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이 무려 3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윤홍식, 2004). 스웨덴의 경우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이 4.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Christopher, 2001), 여성 한부모가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여성 한부모 가구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는 각각 0.7%, 2.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홍식, 2004).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무려 6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홍식·김혜영·이은주, 2005). 또한 공적소득이전(공공부조와 국민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도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바로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일반적 통념과 달리 여성 한부모가구에 대해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성가구주가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율이 무려 5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윤홍식 외, 2005).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취업자의 대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0.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취업한 여성한부모 가구주 가운데 상용직 취업비율도 이와 유사한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홍식, 2004). 더욱이 비정규직 취업자의 대다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인해 여성 한부모가구가 되었을 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이혼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빈곤화가 심각한데, 이는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내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된 여성들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주기와 관련하여 직업의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가족과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경력추구가 말 그대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

다. 이는 여성들에게 직장가정생활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돌봄 노동의 사회적 분담기제를 마련해 줌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느끼는 갈등은 자녀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자연적인 재생산 활동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기 보다는 양육과 노인보호, 가족 복지와 같은 재생산활동을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얼마나 지원해주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자녀양육의 사회적 분담화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양육 지원 인프라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결혼연령의 증가와 미혼율의 상승, 출산율의 하락 등과 같은 인구학적 지표의 변화로 표출되고 있다¹⁹⁾.

현행 제도 하에서 빈곤한 여성한부모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자가족은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가족으로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성한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로 구분되는데, 재가보호에는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및 직업훈련비 등 급여와 복지자금의 대여, 영구임대주택 분양, 고용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부자복지법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한부모 가족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입주, 자활지원 등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재가보호에 비해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자세대를 위한 시설보호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등에 수용, 보호하여 기본 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의 경우에는 18세

19) 특히 1959-69년 사이 출산율의 감소는 90%가량이 부인의 출산율감소에 기인하는 반면, 1979-1989년은 그것의 비율은 61%로 감소하고 대신 결혼연령의 상승이라는 원인이 38%로 증가하였다면, 90년대 이후에는 혼인연령의 변화가 저출산율에 기여한 비중이 195%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김승권, 2000:162에서 재인용; 김승권, 2004).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빈곤 모자세대를 입소시켜 이들의 기본생계보조와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2005).

이들은 생계급여와 양육비와 학비 등의 교육보호, 저소득 용자 혜택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양육비와 학비 등과 같은 자녀교육관련 지원이다. 그러나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생계부양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어린나이에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고등교육과 기타 사적교육기회가 제한됨으로써 빈곤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역시 지역적 차등 없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한부모 여성가구주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양육 및 보육비 지원, 생계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액 역시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빈곤 여성한부모 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책의 범위 및 지급액의 증가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여성의 자립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여성들이 전담해온 돌봄 노동의 성별공유와 사회적 분담화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혼 여성의 인적 자본

무엇보다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는 그동안 여성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각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혼여성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을 규정하는 특정한 사회문화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조건 지워지지만, 구조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연속적인 직업경력과 여성고용의 질, 지원망, 심리·정서적 유대 네트워크의 질과 범위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따라 여성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의 폭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경력단절의 부침이 심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직업경력과 직업지위는 이혼 후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는 물론 고용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혼 전의 경력이나 학력 못지않게 결혼이후 직업경력의 연속성은 이혼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이후 이혼여성의 소득원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혼 이후 이혼여성의 연령과 신체적 건강은 물론 이혼여성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수와 자녀연령, 그리고 돌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 내 자원여부는 이혼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혼한 여성이 부양해야할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은 돌봄 노동과 임금노동의 병행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득수준일 지라도 이혼여성 가구의 소비와 빈곤 수준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여부와 자녀수, 그리고 자녀가 미취학 혹은 취학 아동인가와 같은 자녀의 연령은 이혼 후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이혼여성의 취업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존재와 부담 비용과 이용의 접근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해 사교육의 부담이 중산층 가계에 조차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학동기 및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단순한 돌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의 계급재생산과 맞물려 있는 교육적 성취지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게 된다. 중산층의 전업주부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녀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학습정보제공 등과 같은 뒷바라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적 여건은 단순히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제약적인 조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들 자녀세대의 계층적 지위 결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양육을 지원 하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분담화와 이혼여성을 대신하여 자녀들 돌봐줄 수 있는 가족내적 지원체계 못지않게 부모의 결혼관계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자녀의 원만한 사회화와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소득 수준 역시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제공하게 된다. 전배우자의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여성들의 생활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부관계를 통해 공유해온 자산의 일부를 양도받거나 일정액

수 이상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이혼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삶의 질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의 규모와 경제적 지원액은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동의 폭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이혼여성을 지원해주는 친인척의 네트워크의 유무와 질 또한 이혼 후 자녀부양을 지원해준다거나 유사시 빈곤층으로의 유입을 제어하거나 연기시키는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혼의 심리·사회적 결과

이혼한 사람들은 개인의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전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함으로써 외로움을 느낄 뿐 아니라 이제까지 해 왔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변화순, 2006), 결혼지위 역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이혼자의 위치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역할수행의 문제와 심리·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행동·사회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건강문제 등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 중 남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처럼 성차를 보이는 것도 있다.

개인과 가족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사건으로서의 이혼은 이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다양한 심리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실제적이고 대인관계적인 문제들을 비롯하여 경제적, 정서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Berman and Turk, 198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혼 여성들은 주로 이혼 후 약 1년에서 2년까지 이혼의 원인과 이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데, 주로 이혼 초기의 지배적인 감정으로 분노와 상실감, 외로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고 한다. 분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지냈다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상실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것으로,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격성으로 표출되거나 이혼적응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상실감은 자신을 보호하고 위안해 줄 대상, 사랑하

는 사람,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대상의 상실, 호적상 오점을 남겼다는 것으로부터 연유된 감정들이다. 또한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인 지지체계의 상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성정현, 1998),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혼 후 기존의 부부관계나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으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다수가 결혼 중에 형성된 전배우자와의 사회적, 심리적, 법적인 유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Weiss, 1976). 또한 이혼 여성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지지의 상실을 경험하고 아내와 어머니 등의 가족 내·외적 역할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예컨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여성 가운데는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와 거부적인 자녀훈육방식, 제한적인 부모역할 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 초기에 심각한 죄의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이혼 여성은 가족과 친구, 전배우자,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러한 변화는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혼 후 사회적 연결망은 친구의 상실과 변화, 사회적 활동의 중단, 친척과의 소원한 관계 등을 통해 측정되는데(Ambert, 1988; Furstenberg & Spanier, 1984), 친척은 이혼한 여성에게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망의 상실은 이혼 여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Gerstel, 1988). 특히 이혼자들은 가족과 친구를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여기며 가족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 친구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더 큰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uddleston(1993); Ahrons & Bowman(1982)). 그러나 이혼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기혼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는 경험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이혼자들의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모나 가까운 친척 또한 점차 상호 만남의 빈도가 감소되어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혼자들의 1/3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혼 당사자의 이혼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허들스톤(Huddleston, 1993)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혼 여성들은 대인관계의 확대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 사회적인 활동과 직업을 얻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이혼 여성은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 역할 변화와 이로 인한 역할긴장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축소와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이혼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성정현, 1998). 특히 현재 한국사회는 급증한 이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혼자들이 경험하는 이혼의 영향을 통제하고 최소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혼 여성들의 전반적인 사회심리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대처 연구가 전반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의 구조와 대처 전략을 확인하는 것은 추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배우 가족과 이혼가족의 생활변화를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연구는 유배우 가족의 경우는 '1년 전에 비해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율이 28.1%이지만 이혼가족의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혼가족의 삶의 질 하락은 이혼여성가구주와 이혼 남성가구주의 유의미한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III-1>, 이는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지적한 기존 논의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1년 전에 비교한 가족생활 변화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이혼가족	남성이혼가족	
더 나빠졌다	28.1	47.3	46.4	48.8	29.2
동일하다	49.1	39.4	38.1	41.4	48.6
더 좋아졌다	21.5	12.5	14.2	9.9	21.0
모르겠다	1.3	0.8	1.3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성은 정서적인 외로움을 가장 첫 번째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Kitson and Morgan, 1990; 변화순, 1996), 다음의 어려움은 바로 아동 양육과 자녀교육의 문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혼여성 가구주의 77.3%가 취업상태에 있지만 이들은 유배우 여성에 비해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는 이혼 후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관적인 재산의 감소, 생활의 불규칙함으로 수반되는 지출과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상대적 빈곤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의 논의를 지지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혼후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비교연구가 후속연구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Matin & Bumpass, 1989; South & Spitze, 1986).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며 만일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다면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갈등문제의 해결력이 낮기 때문에 이혼율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이혼 개연성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생활의 위험도간에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경우는 이연주(2005)가 유일하다.

한편 금재호(2001)는 가족 전체 혹은 남성 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생활의 안정성의 관계는 반비례하며, 이것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부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생활의 안정성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금재호, 2001; 김미숙 외, 2005). 즉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생활 참여도와 이혼의 개연성간의 관계를 알아 볼 수는 있지만, 그에 관한 정확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경제생활에 참여하면서 벌어오는 임금이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가족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노동시장참여에 의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여성의 전통적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여성의 크고 작은 시도가 인습적인 부부 및 가족관계를 고집하는 가족원들과의 갈등 및 긴장을 일으키기도 함으로써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V

조사 결과

1. 이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
2.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직업 및 계급지위 변화	3
3.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2
4.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심리·사회적 변화	15

1. 이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이혼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혼여성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와 40대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0.04세로 나타났는데, 이를 2005년 이혼여성의 평균연령을 38.6세로 발표한 통계청의 발표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소 연령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인 이혼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20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혼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여성들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혼한 여성들의 자녀유무를 보면, 자녀가 없는 여성들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결혼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여성이 과다표집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7.5%,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은 99명인 36.1%, 2명은 116(42.3%), ‘3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4%에 달한다.

<표 IV-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20대	7(2.6)	교육 정 도	중졸이하	19(6.9)
	30대	128(46.7)		고 졸	202(73.7)
	40대	124(45.3)		대졸이상	53(19.3)
	50대 이상	15(5.5)			
	계	274(100.0)		계	274(100.0)
결 혼 기 간	구분	빈도(%)	자 녀 수	구분	빈도(%)
	1년 이하	1(0.4)		자녀 없음	48(17.5)
	1~2년 이하	5(1.8)		1 명	99(36.1)
	2~3년 이하	5(1.8)		2명	116(42.3)
	3~5년 이하	16(5.8)		3명 이상	11(4.0)
	5~7년 이하	28(10.2)			
	7~10년 이하	53(19.3)			
	10년 초과	166(60.6)			
	계	274(100.0)		계	274(100.0)

본 조사에서는 이혼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들 전 배우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도 함께 질문하였다. 아래의 <표 IV-2>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전배우자들의 연령 또한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3.18세로 2005년 전국이혼남성의 평균연령인 42.1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62%가 고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29.6%가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당시를 기준으로 이들 전배우자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이혼당시 전배우자의 74.1%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이 있는 전 배우자들의 직업별 분포는 사무직 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두 직종을 합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이혼 당시 전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만원 이하인 비율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보다 높았는데, 131~20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28.6%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당시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응답 또한 24.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2> 응답자 전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20대	2(0.7)	교육 정 도	중졸이하	23(8.4)
	30대	76(27.7)		고 졸	170(62.0)
	40대	152(55.5)		대졸이상	81(29.6)
	50대 이상	44(16.1)			
	계	274(100.0)		계	274(100.0)
이 혼 당 시 직 업	구분	빈도(%)	배 우 자 근 로 소 득	구분	빈도(%)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5(2.5)		없음	67(24.5)
	전문가	4(2.0)		100만원이하	40(14.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7.4)		101~130만원	12(4.4)
	사무종사자	41(20.2)		131~200만원	78(28.6)
	서비스 및 판매종사	79(38.9)		201~300만원	38(13.9)
	기계 및 기능 종사	41(20.2)		301~500만원	25(9.2)
	단순노무종사	15(7.4)		501만원이상	2(0.7)
	계	203(100.0)		계	273(100.0)

나. 이혼의 사유 및 형태, 기간별 특성

이혼여성들의 응답을 통해 이들의 이혼형태 및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본 조사대상자의 83.2%는 협의이혼의 형태이며 이혼까지의 소요된 시간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이혼시점으로 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기간은 3년 내외로 제한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경과된 응답자가 10명(3.7%)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소득변화추이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여 분석할 것이다.

<표 IV-3> 이혼 사유 및 이혼 경과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이혼의 형태	협의 이혼		228(83.2)		
	재판상 이혼		46(16.8)		
	계		274(100.0)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이혼 까지 소요 시간	반년(6개월)이하	69(25.2)	이혼후 경과 기간	1년이하	58(21.2)
	7~12개월	76(27.7)		1~2년 이하	100(36.5)
	13~24개월	47(17.2)		2~3년 이하	106(38.7)
	25~36개월	31(11.3)		3~5년 이하	9(3.3)
	3년(37개월)이상	50(18.2)		10년 초과	1(0.4)
	모름/무응답	1(0.4)			
	계	274(100.0)		계	274(100.0)

이혼여성들의 응답결과를 통해 처음 이혼의 이야기가 시작된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처음 이혼이야기가 부부간에 나타난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약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17.9%, ‘배우자의 폭언/ 폭력’, ‘배우자의 빚, 보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을 원인제공자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의 원인 제공이 87.9%로 본인의 6.3%보다 높았으며, 부부 상호간의 문제는 5.8%로 낮았다.

배우자에 의한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본인에 의한 이혼 사유 부분은 '나의 경제적 무능력', '나의 빚, 보증', '나의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부분에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부부상호 간의 원인에 의한 사유에서는 '부부상호간 애정상실'이 2.9%로 높았다. 무엇보다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과 빚, 보증 등 경제적 요인이 28.1%로 나타나 이혼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 IV-4>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

(단위: 명, %)

원인제공자	원인	명(%)
배우자	배우자의 외도	58(21.2)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49(17.9)
	배우자의 폭언/폭력	33(12.0)
	배우자의 빚, 보증	28(10.2)
	배우자의 도박	22(8.0)
	배우자의 가부장적 의식	13(4.7)
	배우자의 음주	12(4.4)
	배우자의 외박/가출	10(3.6)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7(2.6)
	배우자의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3(1.1)
	배우자의 건강	2(0.7)
	배우자의 이혼요구	2(0.7)
	배우자의 성적 무능	2(0.7)
	소계	241(87.9)
본인	나의 도박	2(0.7)
	나의 경제적 무능력	4(1.5)
	나의 빚, 보증	4(1.5)
	나의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4(1.5)
	나의 본가와 배우자의 갈등	2(0.7)
	나의 외도	1(0.4)
	소계	17(6.3)
부부상호간	자녀문제	2(0.7)
	집안 간 갈등	2(0.7)
	성격차이	2(0.7)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8(2.9)
	종교문제	1(0.4)
	사업실패	1(0.4)
	소계	16(5.8)
계		274(100.0)

이혼의 결정적 사유는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와 동일하게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역시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 ‘배우자의 폭언/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이야기가 시작된 주요 사유나 이혼실행의 결정 사유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원인제공자별로 살펴보면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와 같이 배우자에 의한 부분이 81.4%로 가장 높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인과 부부 상호간의 사유 부분이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보다 각각 3.2%, 3.3%포인트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 IV-5> 이혼의 결정적 사유

(단위: 명, %)

원인제공자	원인	명(%)
배우자	배우자의 외도	57(20.8)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43(15.7)
	배우자의 폭언/폭력	36(13.1)
	배우자의 빚, 보증	27(9.9)
	배우자의 도박	17(6.2)
	배우자의 가부장적 의식	7(2.6)
	배우자의 음주	11(4.0)
	배우자의 외박/가출	10(3.6)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5(1.8)
	배우자의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4(1.5)
	배우자의 건강	2(0.7)
	배우자의 성적무능	2(0.7)
	성적으로 너무 밝힘	1(0.4)
	나만 모르게 시댁형제와 사업시작	1(0.4)
	소계	223(81.4)
본인	나의 도박	2(0.7)
	나의 경제적 무능력	4(1.5)
	나의 빚, 보증	6(2.2)
	나의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4(1.5)
	나의 외도	2(0.7)
	나의 이혼요구	6(2.2)
	나의 폭언/폭력	1(0.4)
	나의 외박/가출	1(0.4)
	소계	26(9.5)
부부상호간	자녀문제	4(1.5)
	집안 간 갈등	2(0.7)
	성격차이	2(0.7)
	종교문제	1(0.4)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6(5.8)
	소계	25(9.1)
계		274(100.0)

한편, 이혼 기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IV-6>과 같다. 이혼한 지 1년 이하에 해당되는 집단 가운데 40대의 비중은 50.0%, 30대가 41.4%로 30-40대가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년 이하의 집단에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9.0%, 43.0%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년 이하 집단 역시 또한 30대와 40대가 50.0%, 41.5%이며, 3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는 40대의 연령층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표 IV-6> 이혼 기간별 연령

(단위: 명, %)

이혼 기간별	구분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1년 이하		5(8.6)	24(41.4)	29(50.0)	0(.0)	58(21.2)
1~2년 이하		2(2.0)	49(49.0)	43(43.0)	6(6.0)	100(36.5)
2~3년 이하		0(.0)	53(50.0)	44(41.5)	9(8.5)	106(38.7)
3~5년 이하		0(.0)	2(22.2)	7(77.8)	0(.0)	9(3.3)
10년 초과		0(.0)	0(.0)	1(100.0)	0(.0)	1(0.4)
계		7(2.6)	128(46.7)	124(45.3)	15(5.5)	274(100.0)

이혼여성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이혼 기간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이혼 1년 이하의 집단에서 대졸이상의 학력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혼한 지 1년 이하의 집단에 속한 이혼여성들의 평균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평균교육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7> 이혼 기간별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이혼기간별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계
1년 이하	3(5.2)	41(70.7)	14(24.1)	58(21.2)
1~2년 이하	7(7.0)	73(73.0)	20(20.0)	100(36.5)
2~3년 이하	9(8.5)	79(74.5)	18(17.0)	106(38.7)
3~5년 이하	0(0)	8(88.9)	1(11.1)	9(3.3)
10년 초과	0(0)	1(100.0)	0(0)	1(0.4)
계	19(6.9)	202(73.7)	53(19.3)	274(100.0)

또한 이혼여성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5%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를 이혼 후 경과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8>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한 지 1년 이하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44.8%), 1명(32.8%), 자녀 없음(1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2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1명(43.0%), 41(41%)의 순, 2~3년이하의 경우에는 2명(40.6%), 1명(32.1%), 자녀없음(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이혼 기간별 자녀 수

(단위: 명, %)

구분 이혼 기간별	자녀수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1년 이하	10(17.2)	19(32.8)	26(44.8)	3(5.2)	58(21.2)
1~2년 이하	13(13.0)	43(43.0)	41(41.0)	3(3.0)	100(36.5)
2~3년 이하	24(22.6)	34(32.1)	43(40.6)	5(4.7)	106(38.7)
4년 이상	1(11.1)	3(33.3)	5(55.6)	0(0)	10(3.6)
					1(0.4)
계	48(17.5)	99(36.1)	116(42.3)	11(4.0)	274(100.0)

다. 이혼여성의 생활실태

이혼여성의 현재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취업여부와 이들의 직종 및 종사상의 지위와 같은 고용의 질과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생활수준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혼여성들은 현재 전체 응답자의 83.2%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혼여성이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구직활동이나 직업 위세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취업상태를 직종과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9>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한 이혼여성의 60.1%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20.2%), 사무직(1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0.9%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인데 비해 응답자의 33.3%만이 상용직이라고 답하고 있어 이혼여성들의 고용 지위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직업지위는 결과적으로 일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쉽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예측하게 된다.

<표 IV-9> 응답자의 현재 취업과 직업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직업	전문가	2(0.9)
	기술공 및 준전문가	4(1.8)
	사무종사자	28(12.3)
	서비스판매 종사자	137(60.1)
	기계 및 기능 종사자	11(4.8)
	단순노무종사자	46(20.2)
	계	228(100.0)
종상지위	고용주	1(0.4)
	자영업자	34(14.9)
	상용직 근로자	76(33.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116(50.9)
	무급 가족 종사자	1(0.4)
	계	228(100.0)

한편 이들 여성의 평균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78.4%가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약 40% 이상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은 곧 이혼여성들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함께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고용조건에 놓여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이 월평균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전체 취업한 여성의 60.9%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총 가구소득 수준 역시 ‘소득이 없음’이거나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64%에 달하고 있어 이혼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표 IV-10> 응답자의 현재 평균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40시간 미만	40~49 시간	50~59 시간	60~69 시간	70시간 이상	무응답 /모름	계
주당평균 근무시간	49 (21.5)	86 (37.7)	37 (11.8)	40 (17.5)	25 (11.0)	1 (0.4)	100.0 (228)
구분	없음	100만원 이하	101~130 만원	131~200 만원	201만원 이상	무응답 /모름	계
월평균 근로소득	44 (16.1)	140(50.0)	32(8.0)	57(20.8)	13(4.7)	1(0.4)	100.0 (274)
가구소득	38 (13.9)	138 (50.4)	20 (7.3)	61 (22.3)	16 (5.8)	1 (0.4)	100.0 (274)

다음으로 이들의 거주 및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11>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여성들의 30.3%가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7.9%는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 집에서 거주한다는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75.2%는 20평 미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 선택에서 고려되었던 점은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인 주택비 상승이 주요한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혼여성들의 이 같은 불안정적인 주거상황은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1> 응답자의 현재 거주 및 주택현황, 주거면적과 현 거주지 고려요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현재 거주 형태	자기집	47(17.2)	현재 집의 주거 전용 면적	20평미만	206(75.2)
	전세(월세 없음)	83(30.3)		20~30평미만	49(17.9)
	보증부 월세	26(9.5)		30~40평미만	17(6.2)
	월세	49(17.9)		40~50평미만	1(0.4)
	사글세	7(2.6)		50평 이상	1(0.4)
	무상(관사, 사택, 친 척집 등)	46(16.8)			
	사회복지시설	16(5.8)			
	계	274(100.0)		계	274(100.0)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현재 주택 형태	단독주택	90(32.8)	현재 거주지 선택시 주요 고려 요인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	155(56.6)
	연립/다세대 주택	72(26.3)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 때문	37(13.5)
	일반아파트	44(16.1)		옛날부터 살아와서	28(10.2)
	임대아파트	16(5.8)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	16(5.8)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8(2.9)		친구, 가족, 친지와의 근접성	15(5.5)
	오피스텔	1(0.4)		배우자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8(2.9)
	시설거주	43(15.7)		생활시설의 편의	3(1.1)
	계	274(100.0)		환경이 좋아서	2(0.7)
				경제적 가치가 오를것 같아서	1(0.4)
	계	274(100.0)		계	265(100.0)

조사대상자의 60%이상이 근로 및 가구총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약 83%가 전세, 월세 등의 주거형태에 살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의 생활수준은 중간층 이하로 볼 수 있다. 이에 응답자들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들의 계층수준을 살펴보면, 이혼 여성의 47.4%는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해서가 최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7.2%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상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응답자의 현재 전반적 생활수준

(단위: 명, %)

구분	빈도(%)
최하층	130(47.4)
하층	102(37.2)
중간층	42(15.3)
계	274(100.0)

2.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직업 및 계급지위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혼을 전후로 한 이들의 취업 및 직업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개인의 재화획득은 노동시장의 지위에 의해 좌우되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개인소득은 시장에서의 상품구매력과 개인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여성의 이혼 후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일차 작업으로서 이혼전, 이혼당시, 이혼 후 여성의 취업지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취업하고 있다면 어떠한 직종과 종사상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전혀 진입하지 않았거나 결혼 혹은 자녀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특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경험비율이 매우 높다. 점차 1인 생계부양자 가족에서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 가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대략 전체 가구의 1/3의 수준에 불과하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05).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삶의 양식과 기회구조는 자신의 소득 못지않게 남편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수준이 중요하다. 특히 결혼관계가 해체된 이혼 후 여성의 삶의 기회와 양식은 남편과의 공동으로 성취한 자산의 분배나 자신의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소득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혼 전에는 공동의 재산, 여성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에 남편의 직업지위가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살

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지위와 소득변화를 분석하는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과 아울러 소득과 소비를 공유해 온 이혼여성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통의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단위로서 가족을 개념화하고, 가족원 모두가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위치를 점유한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혼여성의 이혼 전, 이혼 당해연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혼여성이 속해있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혼 전부터 자신의 독자적인 직업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혼 후 직업을 유지한다면, 이혼으로 인한 직업지위변동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이 자신의 직업지위에 의한 근로소득에 기초한 소비수준이나 유형, 삶의 기회구조의 접근방식은 변화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독립적인 노동시장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혼여성들은 결혼관계의 해체로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역시 이혼 전 여성이 속해있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변동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을 기점으로 이혼 전과 후의 가족구성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는 적어도 전통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 부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직업, 소득, 교육수준을 대표적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분석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노동시장지위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개인의 독립적 지위가 이혼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후에, 이혼전과 당해연도의 경우에 한해 이혼여성이 속해있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별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에 따른 쟁점 역시 매우 복잡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본 분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내(여성)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동시에 고려한 복합지위를 통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별하고 이것과 여성개인의 노동시장지위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여성이 이혼 후 경험하는 지위변화를 보다 동태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이혼 전과 당해연도 이혼여성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판별은 사회계층구분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가구와 개인단위를 상보완적으로 접근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이혼 전과 이혼 당해연도까지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자녀들과 함께 가족의 소득과 소비를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리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계급지위 분석방법이라고 판단된다²⁰⁾.

즉 차별적인 성역할과 노동시장구조에 의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제한받고 있지만, 점차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아짐은 물론 이혼으로 인한 남성생계부양자 상실을 기점으로 여성 스스로의 독립된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지위에 근거한 여성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분석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노동시장적 지위에 기초한 계급지위의 판별을 시도하고, 계급판별결과에 따른 가족의 계급지위와 이혼 후 아내만의 단독 계급지위를 비교함은 물론 또한 이혼 당해연도 여성만의 계급지위와 이혼 후 여성개인의 계급지위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방법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혼여성의 직업지위 변화

이혼 여성의 직업지위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들의 취업지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전에는 조사대상자의 52.6%만이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혼 당시에는 그 비율이 다소 상승하여 54%, 이혼 후 현재까지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이혼여성이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이혼 이후 여성의 취업률은 30% 가량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90년대 사회계급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논쟁의 귀결점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분석단위가 개인인가 가족인가로부터 시작하여 아내의 독자적입 계급적 지위가 가능한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논쟁과 분석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취업율은 남성취업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남성과 등가지위를 갖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적 현실에서 여성의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의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혜영(1996)을 참조할 것.

<표 IV-13> 이혼을 전후로 취업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 시점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일자리 있음	144(52.6)	148(54.0)	228(83.2)
일자리 없음	130(47.4)	126(46.0)	46(16.8)
계	274(100.0)	274(100.0)	274(100.0)

이혼여성들이 이혼전이나 이혼 당시에 비해 이혼 후의 취업율이 높아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의 일부를 양도받거나 자녀양육비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여성 스스로가 생계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자녀가 있는 이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시장진입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혼 후 경과한 시간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취업활동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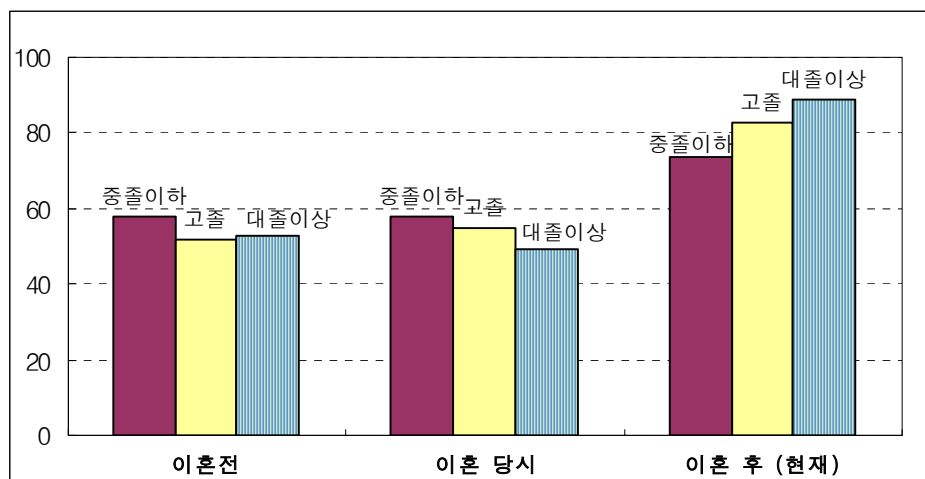
아래의 <표 IV-14>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여성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률보다 훨씬 높지만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업비율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혼한 지 1년 이하 이혼여성 집단에서 취업하고 있다는 응답율은 75.9%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업하고 있다는 응답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한지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이혼전 52.6%, 이혼당시 54.0%에서 75.9%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매우 높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V-14> 이혼 기간별 현재 취업 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혼기간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계
일자리 있음	44(75.9)	83(83.0)	92(86.8)	9(90.0)	228(83.2)
일자리 없음	14(24.1)	17(17.0)	14(13.2)	1(10.0)	46(16.8)
계	58(21.2)	100(36.5)	106(38.7)	10(3.6)	274(100.0)

이혼여성의 취업지위변화를 이혼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취업유무의 차이가 이혼전과 이혼 당시, 이혼 후의 세 개 시점을 통과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교육수준 별로 이혼 전이나 당해연도에 비해 이혼 후(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후 현재 시점에서는 학력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후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 시점 경과에 따른 교육수준별 취업률 변화(%)

<표 IV-15> 시점 변화에 따른 학력별 취업 여부

(단위: 명, %)

교육수준별 \ 시점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중졸 이하	일자리 있음	11(57.9)	11(57.9)	14(73.7)
	일자리 없음	8(42.1)	8(42.1)	5(26.3)
고졸	일자리 있음	105(52.0)	111(55.0)	167(82.7)
	일자리 없음	97(48.0)	91(45.0)	35(17.2)
대졸 이상	일자리 있음	28(52.8)	26(49.1)	47(88.7)
	일자리 없음	25(47.2)	27(50.9)	6(11.3)
계	일자리 있음	144(52.6)	148(54.0)	228(83.2)
	일자리 없음	130(47.4)	126(46.0)	46(16.8)

다음으로는 이혼여성의 자녀수에 따른 취업지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본 설문문항에서는 이혼 전의 자녀수와 이혼 당시, 이혼 이후의 자녀수를 각각 별도로 질문한 바 없으며, 단지 이혼 여성들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수와 가족 관계를 통해 그들의 현재 동거 자녀수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수에 따른 이혼여성의 취업유무 변화에 있어 이혼 전과 후의 비교는 다소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조사대상의 전체 이혼 여성들이 이혼 이후 자신이 출산한 자녀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녀수에 따른 취업유무의 비교에서는 이혼 전, 당시, 이혼 후라는 3개의 시점을 현재의 자녀수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IV-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수에 따른 여성취업지위의 변화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혼 전과 이혼 당해연도에 비해 이혼 후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혼 후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유자녀 이혼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표 IV-16> 현재 동거 자녀수별 취업 여부

(단위: 명, %)

교육수준별 시점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자녀 없음	일자리 있음	24(50.0)	25(52.1)	39(81.3)
	일자리 없음	24(50.0)	23(47.9)	9(18.8)
1명	일자리 있음	48(48.5)	48(48.5)	82(82.8)
	일자리 없음	51(51.5)	51(51.5)	17(17.2)
2명	일자리 있음	64(55.2)	69(59.5)	99(85.3)
	일자리 없음	52(44.8)	47(40.5)	17(14.7)
3명 이상	일자리 있음	8(72.7)	6(54.5)	8(72.7)
	일자리 없음	3(27.3)	5(45.5)	3(27.3)
계	일자리 있음	144(52.6)	148(54.0)	228(83.2)
	일자리 없음	130(47.4)	126(46.0)	46(16.8)

이혼 여성의 취업지위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 개인별로 이혼 전, 이혼당해연도, 이혼 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이들의 취업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아래의 <표 IV-17>에서 보듯이, 이혼시점을 기점으로 이혼 전후 시기에 어떠한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이혼여성의 수는 취업활동의 유무변화를 경험한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유무만을 놓고 본다면 전체 응답자의 51.1%는 이혼으로 인한 취업유무의 변화가 없으며, 약 49%는 이혼으로 인한 취업지위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활동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 가운데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들은 전체 응답자의 42.3%인 116명이며, 이혼 전부터 이혼 후까지 취업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 응답자는 8.8%이다. 또한 이혼 전이나 이혼당해연도에는 취업해 있던 여성들이 이혼 후 현재에는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상실 유형은 전체 응답자 274명 가운데 22명(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혼 전에는 취업하지 않고 있으나 이혼 당해연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6.6%에 해당하는 18명이며, 이혼전과 당해연도에는 취업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이후 현재에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85명으로 약 31%에 달하고 있다.

<표 IV-17> 시점 별 취업변화 유형

(단위: 명, %)

변화유무 \ 시기		유형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명(%)
변화 없음		1	직업 유	직업 유	직업 유	116(42.3%)
		2	직업 무	직업 무	직업 무	24(8.8%)
변화 있음	상실	1	직업 유	직업 유	직업 무	11(4.0%)
		2	직업 유	직업 무	직업 무	8(2.9%)
		3	직업 무	직업 유	직업 무	3(1.1%)
	획득	1	직업 무	직업 유	직업 유	18(6.6%)
		2	직업 유	직업 무	직업 유	9(3.3%)
		3	직업 무	직업 무	직업 유	85(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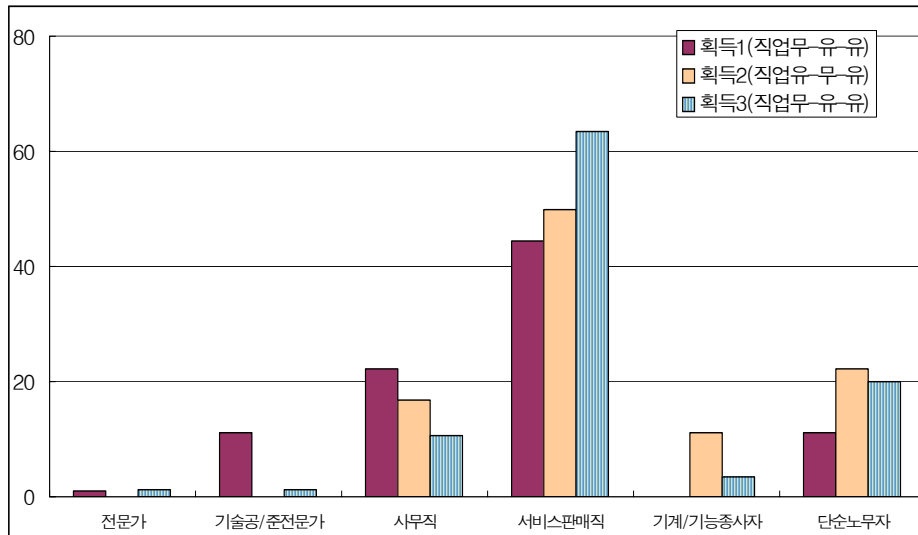
여성의 취업유무는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진입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것이 갖는 사회경제적 함의는 미약하다. 따라서 여성들의 고용상태와 위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종과 직업지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전후로 이들의 노동시장지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혼 전에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144명의 직종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여성들은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65.3%), 사무직종사자(14.6%), 단순노무직(1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당해연도에는 이혼전과 비교하여 취업한 여성의 수적 증가가 매우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종별 변화 역시 크지 않다. 그러나 이혼 이후 취업한 여성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이혼 전 대비 증가율은 무려 58.3%에 이르고 있다.

<표 IV-18> 시점 별 여성의 직종변화

(단위: 명, %)

시점 직업구분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의회의원	-	-	-
전문가	3(2.1)	1(0.4)	2(0.9)
기술공 및 준전문가	3(2.1)	3(2.0)	4(1.8)
사무직 종사자	21(14.6)	20(13.5)	28(12.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94(65.3)	98(66.2)	137(60.1)
기계 및 기능종사자	8(5.6)	9(6.1)	11(4.8)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	-	-
단순노무종사자	15(10.4)	17(11.5)	46(20.2)
계	144(100.0)	148(100.0)	228(100.0)

이혼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한 여성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이혼 전과 유사하게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가 60%에 달하며, 단순노무직이 다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취업 여성이 수적으로 증가한 각 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혼 전과 비교하여 전 직종에서 수적인 증가를 확인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서비스 및 판매직,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수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직군만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아래의 [그림 IV-2]에서 확인하듯이, 이혼 당해연도까지도 취업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후에 취업한 여성(<표 IV-17>의 유형분류 가운데 직업획득 2와 3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발견되고 있다.



〔그림 IV-2〕 이혼 후 취업한 여성의 직종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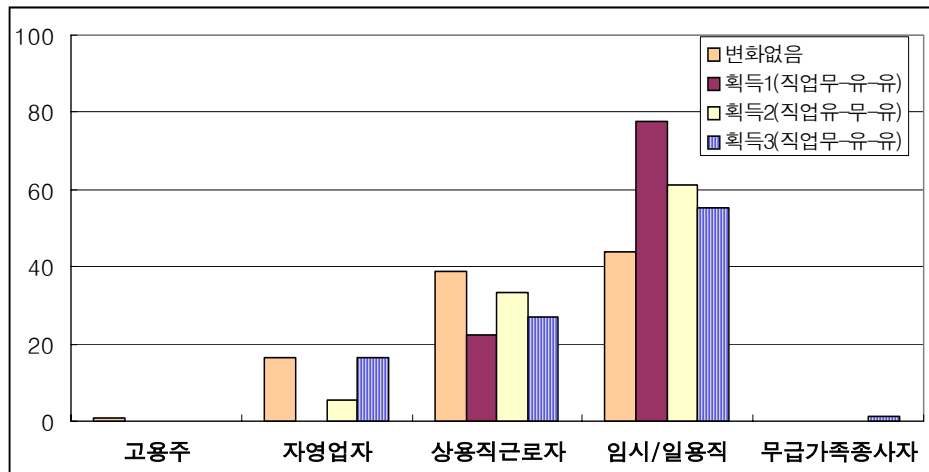
또한 이들의 직업지위를 살펴보면, 이혼 전에 취업한 여성들의 42.4%만이 상용직 근로자이며 33.3%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 이후 취업한 여성들은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의 직업지위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혼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이후 여성들의 취업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들은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자직군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본 조사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혼 여성들이 이혼 후 활발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입한 노동시장 부문은 대단히 제한된 직종에 한해 불안정한 상태의 고용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게토화된 직군에 집중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표 IV-19> 시점 별 직업지위의 변화

(단위: 명, %)

직업구분 \ 시점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고용주	1(0.7)	1(0.7)	1(0.4)
자영업자	28(19.4)	26(17.6)	34(14.9)
상용직 근로자	61(42.4)	60(40.5)	76(33.3)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48(33.3)	56(37.8)	116(50.9)
무급가족종사자	6(4.2)	5(3.4)	1(0.4)
계	144(100.0)	148(100.0)	228(100.0)

이혼여성의 직업지위 변화를 이혼 전부터 지속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표 IV-17>의 취업지위 ‘변화 없음’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과 이혼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들(획득1, 2, 3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을 상호 비교하여 그림으로 표기해 보면, [그림 IV-3]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혼 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 후 노동시장에 새롭게 편입된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사상 지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새롭게 이혼 후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들은 임시직, 일용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 이혼 후 취업한 여성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나. 이혼 후 여성의 계급지위 변화

이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계급지위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급변인은 사회불평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의 기회와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점유하는 계급적 위치에 따라 개인의 행위와 가족의 생활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김혜영, 1996).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이혼 여성의 계급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이혼여성의 직업지위변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이는 직종이나 종사상의 지위만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뿐 직종간 위계나 이에 근거한 지위하락이나 상승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노동시장내 위치만을 상호비교하게 됨으로써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단순히 개인만의 직업지위와 소득수준만을 논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의 기회와 소비수준은 단순히 개인의 기회구조에 의해 조건 지워지기 보다는 가구단위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에 기초한 지위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

과 공유해 온 사회적 지위와 이에 상응하는 소비 및 생활양식의 기회구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급지위에 대한 분석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족단위에 근거하는 것인지 개인단위의 분석방법에 의거한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혼여성의 변화를 보다 복합적으로 가늠해 보기 위한 시도로서 이혼여성의 계급지위 변화를 시론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²¹⁾. 다음으로는 이혼 당시 남편의 지위와 아내의 지위를 결합하여 가구단위의 계급판별을 시도한 뒤, 이혼 후 여성개인만의 단독 계급지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²²⁾.

계급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계급의 범주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서부터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직종변화, 고용지위, 기술적 재화, 타인노동력의 고용 및 착취유무는 물론 노동과정내의 권위구조와 생산수단 소유 여부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어떻게 복합지수화 할 것인가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쟁점을 포괄하고 있다(신광영, 조돈문, 조은, 2003).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의 학력, 직종, 종사상의 지위에 의존하여 비교적 단순화시킨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는데²³⁾, 이는 본 연구의 의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혼여성의 지위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여성개인의 학력, 직종, 종사상의 지위의 3개 지표를 종합하여 이혼여성의 계급적 위치를 확인하고, 이혼 여성의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이후 계급 지위의 변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타인의 고용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는 종사상의 지위와 직종에 따라 기술재와 조직재화의 소유수준을 파

2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은 김혜영(1996:61-78)을 참조할 것.

22) 본 연구의 초점이 계급구분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급판별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구성과 관련 문항이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급구분에 있어 대단히 단순한 구분 방법을 따르고 있다.

23) 계급구획을 위한 논의는 대단히 복잡한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대체로 미국 E.O.Wright와 영국의 G.H. Goldthorpe의 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적합한 계급모형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대체로 라이트와 골쏘프의 모형의 두 축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악하기 위한 학력,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직종의 함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응답내용을 토대로 상시고용인 4인 이상을 고용한 자본가와 4인 미만의 구중간계급,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기술재나 조직재화를 가진 피고용자 집단을 신중간 계급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노동계급으로 분류하다. 특히 노동자 집단을 상용고와 임시고용 및 일고로 구분하여 상용고에 있는 노동자는 핵심적 노동자층이라는 의미에서 노동계급으로 분류하고 임시고와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변부 노동계급으로 분류하는 5계급 모형을 취사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재와 기술재에 대한 자세한 설문문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학력(대졸, 고졸이하)에 준해 판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급 판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주의적 계급판별 방법에 따라 여성의 계급지위변동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20>과 같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계급분석방법에 의거할 경우 이혼 전에 취업하지 않은 47.4% (130명)의 여성들은 계급판별의 자격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문제점은 고유하게 남아있다. 이들을 배제하고 살펴본 이혼여성의 계급이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계급의 하강이동을 발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계급적 지위가 이혼으로 인한 실제적인 하강을 의미하기 보다는 새롭게 계급지위에 편입된 여성들이 주변부노동계급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계급의 구성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20> 시점 별 이혼 여성의 계급지위 변화

(단위: 명, %)

시점 계급구분	이혼 전	이혼 당시 본인의 계급지위	이혼 후 현재의 계급지위
자본가계급	1 (0.7)	1 (0.7)	-
신중간계급	19(13.2)	21(14.2)	27(11.8)
구중간계급	27(18.9)	26(17.6)	35(15.4)
노동계급	43(30.1)	39(26.4)	49(21.5)
주변부노동계급	54(27.8)	61(41.2)	117(51.3)
계	144(100.0)	148(100.0)	228(100.0)

다음은 남편의 계급적 지위를 고려하여 여성의 지위변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혼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 전, 이혼당시, 이혼 후 시점을 두루 비교하기 보다는 이혼당시와 이혼 후만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혼당시를 기점으로 남편과 아내의 노동시장지위 및 직종, 학력 등의 계급기준에 따른 계급판별에 따라 부부의 계급일치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부부의 약 61.7%가 남편의 계급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일치하는 경우는 10.1%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상위의 계급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23.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혼 당시 남편들이 실직,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우월적인 계급지위에 대한 복잡한 해석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마찬가지로 남편 우위형으로 분류된 사례 역시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계급지위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귀속시켰다. 부부간 상호계급적 상충이 나타난 경우로는 남편과 아내가 구중간, 신중간 계급에 각기 속해있어 위계상 상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표 IV-21> 이혼당시의 부부간 계급일치여부

(단위: 명, %)

계급 일치여부	일치 부부	불일치 부부		상충형	계
		남편우위	아내 우위		
명 (%)	25(10.1)	153(61.7%)	59(23.8)	11(4.0)	248(100.0)

남편과 아내 각각의 지위를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의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기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전업주부의 계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남편과 아내가 각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경우와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간헐적이고 임시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를 고려하여 얼마나 적절한 결합지위를 구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에릭슨(E.R. Erickson)이 제시한 ‘지배의 원칙(dominance ordering)’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Erickson, 1984). 즉 부부

가운데 어느 한사람이 상시고용으로 일하며 높은 서열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보다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보다 상위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산적 위치에 준해 그 가구의 대표적 계급적 지위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표 IV-21>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조사결과는 남성의 계급적 우위가 여성이 계급적 우위에 있는 경우보다 2.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배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우세한 남편의 계급지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표 IV-22>은 이러한 지배의 원칙에 따라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상시직에 고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각각의 계급판별기준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계급지위를 비교한 후에 우세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계급지위에 준해 계급을 판별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성개인만의 계급지위에 준해 계급변화를 살펴본 경우 보다 이혼 이후 하향이동의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즉 남성 중심의 노동환경에서 여성들의 노동경력이나 직종, 종사상의 지위는 남성보가 결코 우세하지 않을 것이며, 남편의 지위와 공동으로 결정된 아내의 계급적 지위는 여성만의 단독 계급지위보다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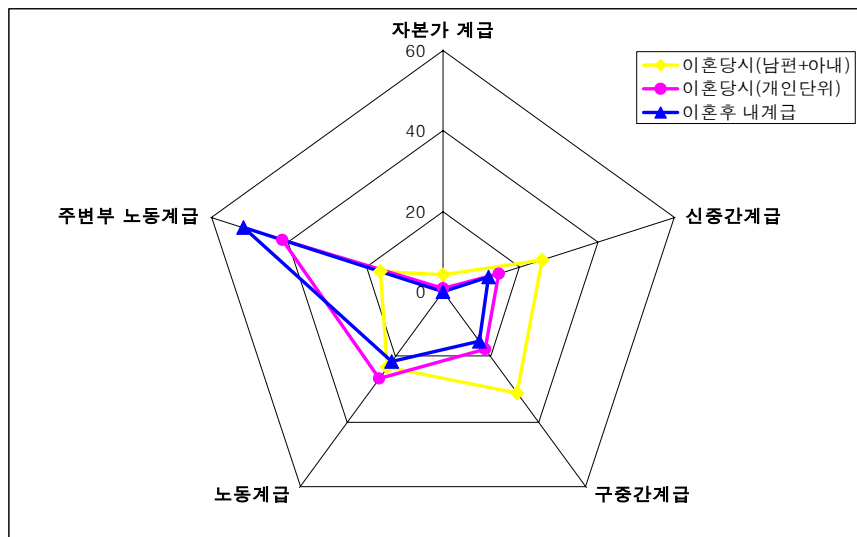
<표 IV-22> 이혼당시의 부부간 계급일치여부

(단위: 명, %)

시점 계급구분	이혼 당시			이혼 후(현재) 여성의 계급
	배우자(남)	본인(여)	지배의 원칙(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세계급에 근거한 판별	
자본가계급	9(3.3)	1 (0.4)	10(4.1)	-
신중간계급	59(21.5)	21(7.7)	59(24.3)	27(9.9)
구중간계급	62(22.6)	26(9.5)	72(29.6)	35(12.8)
노동계급	45(16.4)	39(14.2)	54(22.2)	49(17.9)
주변부노동계급	26(9.5)	61(22.3)	38(15.6)	117(42.7)
계급판별 제외자 무직/전업주부	73(26.6)	148(46.0)	계급상충 10(4.1) 판별불능 31(11.3)	46(16.8)
계	274(100.0)	274(100.0)	274(100.0)	274(100.0)

<표 IV-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의 원칙’ 따른 계급판별 결과, 자본가 계급이 4.1%, 신중간계급 24.3%, 구중간계급 29.6%, 노동계급 22.2%, 주변부 노동계급 15.6%, 남편과 아내의 상충적 위치이거나 부부 무응답 등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1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당시 여성개인의 계급지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의 원칙을 적용한 계급적 지위와 이혼 후 여성만의 계급적 지위를 살펴보면 하향이동의 정도는 매우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은 계급판별이 불가능하거나 상충적인 지위를 배제한 뒤, 각각의 계급판별 기준에 따라 이혼여성의 계급지위를 살펴본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계급 변동의 크기를 그물망의 중첩 혹은 폭의 넓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혼당시 여성의 단독 계급지위와 이혼 후 여성의 계급지위를 비교해 본다면, 이혼 후 모든 계급에서의 비율적 하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독 주변부 노동계급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혼 당시 남편과 여성의 계급지위를 혼합하여 지배의 원칙에 따라 판별한 가족단위의 계급지위와 현재 이혼여성의 계급지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든 계급에서 하강 비율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변부 노동계급의 구성 비율만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 이혼 당시와 이혼 후 여성의 계급지위변동 (단위: %)

다. 소결 및 함의

90년 중반 이래 가파르게 증가해온 이혼율은 2004년을 기점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가족변동의 맥락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온 이혼율이 급격하게 감소할 만한 이유를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직업지위를 통해 이혼을 전후로 한 이혼여성의 지위변동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독립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관계의 해소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독립적으로 여성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인 복지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와 같이 남녀 차별이 큰 사회일수록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남녀격차 또한 크기 때문에 결혼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유대 이외에 여성의 경제사회적 자원의 접근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관계의 해체는 여성에게 단순한 배우자와의 결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주 생계소득자의 상실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접근가능성 감소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서 여성의 직업적 지위변동과 계급지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혼을 전후로 취업유무의 변화과정을 경험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이혼이후 직업변화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는 이혼으로 여성 스스로가 생계부양자가 되기 위한 취업활동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변화이다. 이들이 직업변동을 직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새롭게 취업한 직종의 대부분은 서비스판매직이거나 단순노무자이며, 이들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직이거나 임시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여성의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혼 후 여성들이 새롭게 편입된 직군은 사회적으로 계도화(Ghettoization)되어 있는 불안정하고 저임금 직군에 몰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직업경력이 일천하거나 인적자본이 열악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구조가 성분절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성별화 된 노

동시장으로 인해 여성은 일하지만 남성보다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Joan Smith, 1984).²⁴⁾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정규직, 비정형적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보편적인 노동시장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혼 여성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 예외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성빈곤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시장의 환경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업과 저임금노동자의 증가가 빈곤의 증가를 가져오듯이 실업과 여성임시, 일용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이숙진, 200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계급지위를 이혼 전후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혼 후 여성들이 확보한 노동시장 지위가 임시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지위 이동은 주로 하향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만의 계급지위를 이혼 전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주변부 노동계급을 제외한 여타 계급 하강 이동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계급지위와 아내의 계급지위를 결합하여 지배의 원칙에 따라 판별한 결과와 이혼 후 여성만의 단독계급지위만을 비교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든 계급에서 하강이동의 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성들의 새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통로는 주변부 노동시장의 비정형노동이라는 한정된 입직 분야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지위와 직종이 주요한 판별준거로 사용된 계급변화 분석결과 역시 직업변화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혼한 여성 가운데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자산 확보가 마련된 여성들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게 되

24) 스미스(Smith)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여성화’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고용을 증대시키긴 했지만,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 및 저임금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어 여성가족들은 여전히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mith, 1984).

지만, 이들이 이동해 갈 수 있는 직업이나 계급적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혼여성의 과거 직업경력이나 학력, 전문적 기술 등에 따라 개인적인 편차는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혼 후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은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생애고용이 선택 가능한 사회 환경이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과 가족의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와 열의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시장의 진입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남녀 임금 및 기회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 일과 직장생활의 양립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생애적 취업활동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3.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이혼을 전후로 이혼여성의 소득과 빈곤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절에서는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어 이혼을 전후한 빈곤율과 이혼을 전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혼을 전후한 여성가구주 및 가구주의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여 이혼여성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혼여성 가족 내 18세 이하의 자녀 유무에 따른 비교와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이다. 앞서 이혼여성의 취업 및 직업지위변화에서는 자녀의 유무와 수에 따른 구분을 일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는 18세 이하의 자녀유무만을 분석에 주요변수로 설정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는 여성 취업의 중요한 장애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여성 빈곤이 가속화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돌봄 책임을 대표하는 아동(자녀)양육여부가 이혼 전후 가구의 경제적 생활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혼 전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앞서 자세히 살펴본 이혼여성의 취업지위변화를 본 절에서는 취업유무로 단순화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빈곤의 여성화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성별분업에 근거한 결혼생활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혼생활 동안 여성은 자신의 자본을 재생산 노동에 투여해 재생산과 관련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성별분업에 근거한 결혼관계가 해체되는 경우 여성이 축적한 재생산과 관련된 인적자본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설령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생산 관련 인적자본을 장기간 축적하지 못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혼 후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다면 여성이 결혼생활 기간 동안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면 여성이 이혼으로 받는 경제적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분석방법 및 변수의 구성

이혼 전후의 여성가구(한부모가구 포함)소득수준과 빈곤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절에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이혼여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변수화하기 위해 이들의 이혼 후 현재의 연령, 교육수준, 이혼 기간, 18세 이하의 자녀 유무, 이혼 전 취업상태, 이혼 종류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해체를 전후한 가구의 소득구성 변화는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후 세 시기로 나누어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혼 전후 여성(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전후의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빈곤가구의 측정은 가구의 소득 대비육구비율이 1.0이하일 때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분석을 위해서는 이전소득의 원천에 따라 4가지 주요한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적이전 소득(다른 가족원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전된 소득), 사회보험(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부자복지법에 의

한 지원 등), 아동양육비(전 남편으로부터의 이전)의 빈곤감소 역할의 변화를 이혼 전후로 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든 이전소득을 제외한 순 가구소득으로 가구의 빈곤률을 시간의 변화(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에 따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4가지 주요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순 가구소득(소득이전 전의 가구소득)에 사적이전을 더한 이후, 사적이전 전의 빈곤율과 사적이전 후의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의 경우도 사적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 가구소득에 각각의 이전소득을 개별적으로 더해 소득이전 전후의 빈곤감소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의 개별적 빈곤감소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적이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에 대해 절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성을 이혼 이후의 가구구성의 차이에 따라 아동양육여성 가구와 비아동양육여성가구, 이혼 전 취업여성가구와 비취업여성가구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추론통계 방법인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해 이혼 전후 가구의 빈곤지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이혼 1년 전의 빈곤여부, 이혼 당시의 빈곤여부, 이혼 후 현재의 빈곤여부를 사용하였다(소득-육구비율이 1.0과 같거나 이하이면 1, 이상인 경우 0). 독립변수로는 나이(년), 미성년 자녀수, 교육수준(대제 이상 이하), 이혼 전 취업 여부, 이혼 당시 취업, 현재 취업, 이혼 기간, 이혼 종류, 사적이전, 공공부조 이전, 전 남편지원을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와 미성년 아동 수는 연속변수이고, 교육수준은 대제이상(1), 대제이하(0), 이혼 전 취업은 이혼 전 취업(1), 비취업(0), 이혼 당시 취업(1), 비취업(0), 현재 취업(1) 비취업(0)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이혼기간, 사적이전, 공공부조, 전 남편의 지원은 모두 연속변수이다. 다만 이혼 당시 취업은 이혼당시와 이혼 후 빈곤지위 분석에만 사용하였고, 현재 취업, 이혼기간, 전 남편지원은 이혼 후 빈곤지위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이혼 기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앞서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이혼한 시점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

응기간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제로 이혼 후 경제적 지위는 이혼 기간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Duncan and Hoffman, 1985).

<표 VI-1>은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본 자료에서 이혼 후 여성가구주의 81.7%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약 87%의 아동이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후 어머니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Molina, 1999; Seltzer, 1994) 유사하다. 반면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구주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은 대략 51.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홍식 외, 2005). 연령분포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30대가 가장 높고(50.5%),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40대의 비중(39.6%)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예상과 같이 50대 이상의 비율은 비양육 가구주가 19.6%로 양육가구주의 2.9%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른 연령구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취업 여성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취업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아동양육여부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중 대학재학이상의 고학력자가 21.4%로 비양육 여성 8.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학력수준이 비취업여성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둘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학력이 취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혼기간은 아동양육여부와 관계없이 2년에서 3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취업여부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라 미성년 아동의 양육여부를 비교했을 때 양자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혼 전 취업 여부가 미성년 자녀 양육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종류는 아동양육여부, 이혼 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합의이혼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백 분율(%))

	18세 이하 아동유무		이혼 전 취업 여부		전체 (N=252)
	유 (n=206)	무 (n=46)	취업 (n=131)	비 취업 (n=121)	
연령					
20대	1.5	4.4	3.8	0.0	2.0
30대	50.5	37.0	48.9	47.1	48.0
40대	45.2	39.1	45.0	43.0	44.1
50대 이상	2.9	19.6	2.3	9.9	6.0
교육수준					
고졸이하	6.3	8.7	7.6	5.8	6.8
고졸	72.3	82.6	75.2	76.0	74.2
대재이상	21.4	8.7	19.9	18.2	19.1
이혼기간					
1년 이내	16.5	17.4	13.7	19.8	16.7
1년~2년 이내	37.4	30.4	38.9	33.1	36.1
2년~3년 이내	44.7	50.0	45.0	46.3	45.6
3년 이상	1.5	2.2	2.3	0.8	1.6
미성년 아동					
있음	-	-	83.2	80.2	81.8
없음	-	-	16.8	19.8	18.3
이혼 전 취업상태					
취업	52.9	47.8	-	-	52.0
비 취업	47.1	52.2	-	-	48.0
이혼 종류					
합의이혼	82.5	87.0	81.7	85.1	83.7
재판이혼	17.5	13.0	18.3	14.9	16.7

나. 이혼을 전후한 여성의 소득변화

1) 이혼여성의 소득구성의 변화

<표 IV-24>는 이혼을 전후한 가구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임금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임금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혼 전과 이혼 당시를 거치면서 감소해 이혼 후에는 77.4%로 이전 시기에 비해 대략 20% 포인트 내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 본인의 임금소득은 이혼 전과 이혼당시는 전체 가구소득의 1/3에 불과했지만 이혼 후에는 71.5%를 차지해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으로 공공부조는 이혼 전과 이혼 당시에는 주요한 소득구성요소가 아니었으나 이혼 후에는 전체 가구소득의 9.7%를 차지하면서 임금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또한 전남편의 지원(양육비로 추정되는)도 이혼 후 가구소득의 6.3%를 차지해 공공부조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득은 이혼 전, 이혼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각각 43.0%, 41.2% 감소했다. 즉, 이혼으로 인해 여성(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요한 원인은 주 생계부양자인 남편의 임금소득 상실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전체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후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임금소득	2,268	96.4	2,146	94.2	1,038	77.4
(본인임금소득)	(744)	(31.4)	(754)	(32.9)	(958)	(71.5)
공공부조	6	0.3	13	0.6	130	9.7
사회보험	14	0.6	8	0.4	3	0.2
사적이전	13	0.6	53	2.3	28	2.1
전남편지원	-	-	-	-	84	6.3
기타소득	52	2.2	53	2.3	58	4.3
총 소득	2,353	100.0	2,279	100.0	1,341	100.0

다음은 이러한 가구소득 구성의 변화를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구분해 살펴본 것이다. <표 IV-25>와 <표 IV-26>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 IV-24>의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혼 후 공공부조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로 조금 증가했고, 전남편의 지원도 양육자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7.7%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임금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비양육자의 경우 이혼 전과 이혼 당시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임금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어 양육자 가구보다 이혼 전과 당시에 가구소득에서 임금소득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양육자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후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임금소득	2,162	95.7	2,036	92.9	988	74.7
(본인임금소득)	(682)	(32.7)	(693)	(34.2)	(920)	(72.5)
공공부조	7	0.3	16	0.7	158	11.9
사회보험	17	0.8	10	0.5	4	0.3
사적이전	14	0.6	62	2.8	30	2.3
전남편지원	0	0.0	0	0.0	102	7.7
기타소득	58	2.6	68	3.1	42	3.2
총 소득	2,259	100.0	2,191	100.0	1,323	100.0

<표 IV-26>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비양육자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후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임금소득	2,746	99.0	2,637	98.7	1,262	88.9
(본인임금소득)	(1,020)	(26.6)	(1,024)	(28.0)	(1,127)	(67.6)
공공부조	0	0.0	0	0.0	7	0.5
사회보험	0	0.0	0	0.0	0	0.0
사적이전	7	0.3	14	0.5	17	1.2
전남편지원	0	0.0	0	0.0	0	0.0
기타소득	22	0.8	22	0.8	133	9.4
총 소득	2,774	100.0	2,672	100.0	1,419	100.0

그러나 이혼 후 상황을 보면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양육자의 경우 양육자에 비해 본인 임금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물론 임금소득 액수는 비양육자가 1,127천원으로 양육자 920천원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양육자의 경우 기타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고 공공부조, 사적이전, 전납편의 지원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양육자의 공공부조 월 이전 액이 158천원인데 반해 비양육자는 7천원에 불과했다. 총가구소득은 양육자 가구가 이혼 전에 비해 41.4%에 감소한 반면 비양육자 가구는 이보다 7.4% 포인트 큰 48.8%가 감소했다. 이혼 후 절대적 가구소득은 비양육자 가구가 높지만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비양육자가구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자 가구의 가구원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한다면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대비육구비율을 기준으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혼으로 인한 양육자 가구의 경제적 손실이 비양육자 가구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서 제시된 <표 IV-27>과 <표 IV-28>은 이혼을 전후한 가구 소득구성의 변화를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로서, 이혼 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전과 당시는 전체가구의 소득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혼 후에는 취업자의 임금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2%로 비취업자의 66.0%보다 8.2% 포인트 높게 조사되었다. 공공부조는 두 집단 모두에서 임금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으로 나타났는데 취업가구는 10.8%, 비취업가구는 8.5%로 나타났다.

주목할 결과는 이혼 전과 이혼 당시 총가구소득은 취업자 여성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혼 후에는 비취업자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실제로 이혼 1년 전 가구소득은 취업자가 2,636천원인데 반해 비취업자 가구는 2,047천원으로 취업자 가구의 77.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혼 후 가구소득은 비취업자가 1,394천원으로 취업자 가구 1,292천원보다 102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혼 후 두 가구의 본인(여성가구주)의 임금소득은 취업자가 992천원, 비취업자가 920천으로 취업자가 72천원 많았다. 그러나 이혼 전 취업여성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여성이 취업한 일자리가 경험과 경력이 중요시되고,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단순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혼 전 취업여부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IV-27>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취업자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후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임금소득	2,500	94.8	2,273	93.7	1,040	80.5
(본인임금소득)	(1,172)	(44.5)	(1,047)	(30.9)	(992)	(74.2)
공공부조	12	0.5	20	0.0	140	10.8
사회보험	28	1.1	16	0.8	3	0.2
사적이전	12	0.5	44	0.7	8	0.6
전남편지원	0	0.0	0	0.0	67	5.2
기타소득	84	3.2	74	3.1	33	2.6
총 소득	2,636	100.0	2,426	100.0	1,292	100.0

<표 IV-28> 이혼을 전후한 소득구성의 변화: 비취업자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후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천원	백분율
임금소득	2,017	98.5	2,008	94.7	1,036	74.3
(본인임금소득)	(0)	(0.0)	(0)	(0.0)	(920)	(66.0)
공공부조	0	0.0	6	0.3	119	8.5
사회보험	0	0.0	0	0.0	3	0.2
사적이전	13	0.6	63	3.0	50	3.6
전남편지원	0	0.0	0	0.0	101	7.2
기타소득	17	0.8	43	2.0	85	6.1
총 소득	2,047	100.0	2,120	100.0	1,394	100.0

2) 이혼을 전후한 소득수준(소득대비육구비율)의 변화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혼시점과 이혼 후의 시간적 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표준화된 비교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소득대비 육구비율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IV-29>과 <표 IV-30>은 이혼을 전후한 소득수준의 변화를 전체, 아동양육여부,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라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혼 전 후의 소득수준(소득대비육구비율)의 변화를 보면 이혼 1년 전과 이혼 당시를 비교했을 때 소득대비육구비율은 7.7%(2.72에서 2.51)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 1년 전 가구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의 2.72배에서 이혼 당시는 2.51배로 감소한 것이다. 다시 이혼 당시와 이혼 후를 비교해보면 소득대비육구비율은 2.51에서 1.84로 29.9%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이혼 전과 후를 비교하면 소득대비육구비율은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9> 이혼을 전후한 소득수준(소득-육구비율)의 변화: 아동양육 여부

	이혼 1년 전	이혼 당시	이혼 1년 후
소득-육구 비율(Income-to-needs ratio)			
전체	2.72	2.51	1.84
양육자	2.40	2.23	1.60
비양육자	4.12	3.78	2.88
소득-육구비율의 백분율(%) 변화			
	1년 전에서 이혼당해	이혼당해에서 1년 후	1년 전에서 이혼 1년 후
전체	-7.7	-29.9	-35.3
양육자	-7.1	-30.9	-35.8
비양육자	-8.3	-27.5	-33.5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의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아동양육을 지적하고 있는데 (DaVanzo and Rahman, 1993; Teachman & Paasch, 1994) 본 분석에서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한부모가구

의 소득수준이 비양육여성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상대적 저하를 보면 두 집단모두 유사한 수준의 소득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육가구의 경우 이혼 전과 이혼 후를 비교했을 때 소득대비육구비율은 2.40에서 1.60으로 35.8% 감소했다. 비양육가구의 경우 소득대비육구비율수준은 양육가구에 비해 높지만 소득대비육구비율의 감소 폭은 33.5%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12에서 2.88). 즉,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비양육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아동을 양육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 전 절대소득 수준이 비양육 가구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 전 양육가구의 소득대비육구비율은 2.40으로 비양육가구 4.12의 절반이 조금 넘는 58.3%에 불과했다.

<표 IV-30> 이혼을 전후한 소득수준(소득-육구비율)의 변화: 이혼 전 취업상태

	이혼 1년전	이혼 당시	이혼 1년후
	소득-육구 비율(Income-to-needs ratio)		
전체	2.72	2.51	1.84
취업	3.03	2.67	1.80
비 취업	2.38	2.33	1.89
	소득-육구비율의 백분율(%) 변화		
	1년 전에서 이혼당해	이혼당해에서 1년 후	1년 전에서 이혼 1년 후
전체	-7.7	-29.9	-35.3
취업	-11.9	-36.3	-43.9
비 취업	-2.1	-21.9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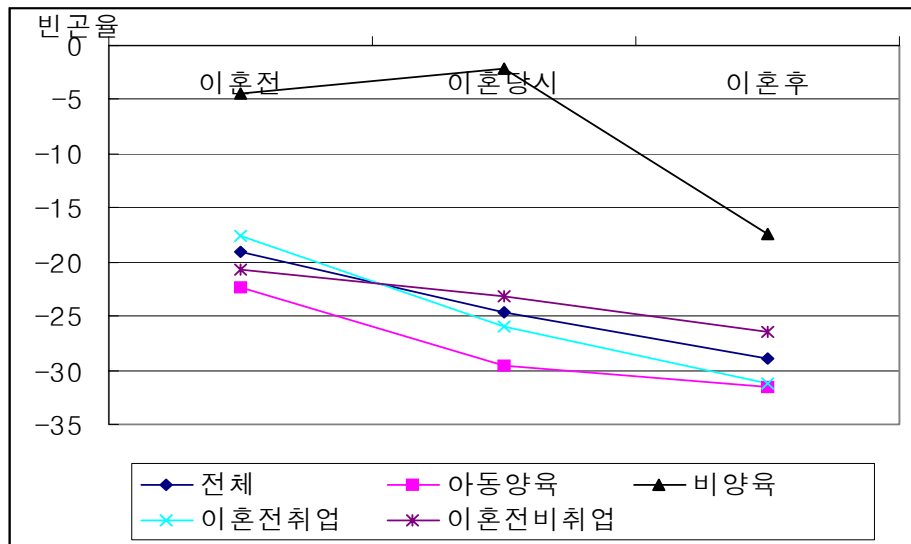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혼 전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소득대비육구비율의 변화를 보면 취업가구의 경우 이혼 전 3.03에서, 이혼 당시 2.67, 이혼 후 1.80으로 각각의 기간 동안 11.9%, 36.3%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이혼 전 후를 비교해 보면 이혼 전 취업여성의 가구의 소득대비육구비율은 무려 43.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반면 비취업가구는 이혼 전에서 이혼 당시의 소득 감소 폭이 취업가구의 1/5에 불과한

2.1%에 그쳤다. 이혼 당시에서 이혼 후의 소득감소 폭도 취업가구의 6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혼을 전후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 폭은 23.5%였다. 이로 인해 이혼 전과 이혼 당시까지만 해도 취업가구의 소득수준이 비취업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높았으나 이혼 후에는 양자의 소득수준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혼 후 비취업가구의 소득수준은 취업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한번 이혼 전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이혼여성의 빈곤지위변화, 사회안전망의 역할 및 빈곤 결정요인

1) 빈곤율의 변화

[그림 IV-5]는 이혼 전후로 한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율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먼저 전체 가구를 보면 이혼 전 빈곤율은 19.1%로 이혼을 경험하는 집단이 이혼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현재 한국사회 전체 빈곤율이 11.6%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김교성, 2006).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경우도 이혼을 경험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미 이혼 전에 가구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Lanahan and Booth, 1989; Ozawa and Yoon, 2003). 이혼 전 19.1%이던 빈곤율은 이혼 당시 24.6%로 28.8% 증가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와 이혼 후를 비교하면 빈곤율은 17.9% 증가해 이혼 후 29.0%를 기록한다. 즉, 이혼을 경험한 여성(한부모)가구 셋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5] 이혼을 전후한 빈곤율의 변화

이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전 양육가구의 빈곤율은 22.3%인데 반해 비양육가구의 빈곤율은 4.4%에 불과하다.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양자 간의 차이는 줄어들지만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31.6%로 비양육가구의 빈곤율 17.4% 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렇지만 이혼을 전후한 빈곤율의 변화율을 보면 아동양육가구의 빈곤율은 41.7% 증가에 그치는데 반해 비양육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295.5%나 증가한다. 즉, 절대적 경제수준은 아동양육가구가 더 열악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비양육가구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 전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혼 전은 취업여성가구의 빈곤율이 비취업여성가구의 빈곤율 보다 낮지만 이혼 당시와 이혼 후를 보면 취업여성가구의 빈곤율이 비취업여성가구의 빈곤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혼을 전후한 빈곤율의 변화를 보면 비취업가구의 빈곤율은 28.0%(20.7%에서 26.5%) 증가에 그치는데 반해 취업가구의 빈곤율은 무

려 77.8%(17.6%에서 31.3%)나 증가한다. 즉,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 모두에서 이혼 전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한부모)가구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감이 비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한부모)가구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이 빈곤예방의 최선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빈곤의 여성화는 단순히 성별분업에 근거해 여성의 인적자본이 재생산 영역에 투입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이다.

2)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이혼을 전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30>과 같다. 이혼을 경험한 여성(한부모)가구의 이혼 전 빈곤율은 이전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0.6%에서 4가지 이전소득을 모두 추가했을 때 19.1%로 낮아져, 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적이전 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5.8%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혼 당시를 보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순 가구소득의 빈곤율은 27.0%이고 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감소율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큰 소득은 사적이전 소득으로 분석되었고, 공공부조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순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은 46.4%였으며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소득은 이혼 전과 이혼 당시와 달리 공공부조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조의 빈곤감소효과는 29.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아동양육비가 9.7%로 조사되었으며, 이혼 전과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1.7%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별거를 경험한 여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라는 선행연구(윤홍식, 2004)에 비해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1>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 전체

	순 가구소득	순가구소득 +사적이전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 양육비 (총가구소득)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				
이혼 전	20.6	19.4	19.4	19.1	19.1
이혼당시	27.0	25.4	25.4	24.6	24.6
이혼 후	46.4	45.6	45.6	32.1	29.0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의 백분율(%) 변화				
	순가구소득 +사적이전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양육비	순가구소득 +전체이전소득
이혼 전	-5.8	0	-1.5	0	-7.3
이혼당시	-5.9	0	-3.1	0	-8.9
이혼 후	-1.7	0	-29.6	-9.7	-37.5

다음으로 아동의 양육유무에 따른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양육가구의 경우에는 이혼 1년 전 빈곤율은 이전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4.3%에서 4가지 이전소득을 모두 추가했을 경우 22.3%로 낮아져, 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양육여성의 경우 이혼 1년 전에 이전소득의 반빈곤 효과(Anti-poverty effect)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전소득을 추가하기 전과 후의 빈곤율이 4.4%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성은 이혼 전 보다 이혼 이후에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감소한다. 이혼 후 이전소득의 양육여성가구에 대한 반빈곤 효과는 39.1%이고, 비양육여성가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37.2%로 조사되었다.

이전소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가구의 경우 이혼 전에는 사적이전 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중요한 반면 이혼 후에는 공공부조와 아동양육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양육가구의 경우 이혼 전에는 앞서 보았듯이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전혀 없었지만, 이혼 당시와 이혼 후를 보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각각 50.1%, 3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리하면 양육가구의 빈곤감

소는 공공부조와 전남편으로부터 이전되는 자녀양육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비양육가구의 빈곤감소효과는 전적으로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 아동양육여부

	순가구소득	순가구소득 +사적이전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 양육비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				
양육자					
이혼 전	24.3	22.8	22.8	22.3	22.3
이혼당시	32.0	30.6	30.6	29.6	29.6
이혼 후	51.9	51.9	51.9	35.4	31.6
비양육자					
이혼 전	4.4	4.4	4.4	4.4	4.4
이혼당시	4.4	2.2	2.2	2.2	2.2
이혼 후	27.7	17.4	17.4	17.4	17.4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의 백분율(%) 변화				
	순가구소득 +사적이전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양육비	순가구소득 +전체이전소득
양육자					
이혼 전	-6.2	0	-2.2	0	-8.2
이혼당시	-4.4	0	-3.3	0	-7.5
이혼 후	0	0	-31.8	-10.7	-39.1
비양육자					
이혼 전	0	0	0	0	0
이혼당시	-50.1	0	0	0	-50.0
이혼 후	-37.2	0	0	0	-37.2

다음으로 이혼 전 취업여부에 따른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취업여성의 이혼 전 빈곤율은 이전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9.9%에서 4가지 이전소득을 모두 추가했을 때 17.6%로 낮아지고 있어 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적이전 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3> 이혼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 취업여부

	순가구소득	순가구소득 +사적이전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 양육비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					
취업자					
이혼 전	19.9	18.3	18.3	17.6	17.6
이혼당시	29.0	27.5	27.5	26.0	26.0
이혼 후	46.6	46.6	46.6	34.4	31.3
비취업자					
이혼 전	4.4	4.4	20.7	20.7	20.7
이혼당시	4.4	2.2	23.1	23.1	23.1
이혼 후	27.7	17.4	44.6	29.8	26.5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의 백분율(%) 변화					
	순가구소득 +사적이전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양육비	순가구소득 +전체이전소득
취업자					
이혼 전	-8.0	0	-3.8	0	-11.6
이혼당시	-5.2	0	-5.5	0	-10.3
이혼 후	0	0	-26.2	-9.0	-32.8
비취업자					
이혼 전	-3.7	0	0	0	-3.7
이혼당시	-6.9	0	0	0	-6.9
이혼 후	-3.7	0	-33.2	-11.1	-42.8

이혼 당시를 보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순 가구소득의 빈곤율은 29.0%이고 이전 소득으로 인한 빈곤감소율은 10.3%로 나타났다.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큰 소득은 공공부조이며, 다음은 사적이전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순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은 46.6%였으며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3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소득은 이혼 당시와 같이 공공부조로 조사되었다. 공공부조의 빈곤감소효과는 26.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아동양육비가 9.0%로 조사되었으며, 이혼

전과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0%였다.

비취업가구를 보면 이혼 전 순가구 소득 기준 빈곤율은 21.5%로 취업가구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이전으로 인한 빈곤감소효과는 3.7%로 취업가구 11.6%의 1/3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표 IV-27>과 <표 IV-28>을 보면 비취업가구의 소득수준이 취업가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비취업가구가 취업가구보다 낮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이혼 당시를 보면 순소득기준 취업가구의 빈곤율은 24.8%로 나타났고, 소득이전 후의 빈곤율은 23.1%로 낮아져 이전소득의 빈곤감소율이 6.9%로 이혼 전에 비해 3.2% 포인트 상승했다.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큰 이전소득은 사적이전 소득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자녀양육비 등의 빈곤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를 보면 순소득기준 빈곤율은 46.3%였다. 비취업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전소득이 없을 경우 절대빈곤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율은 42.8%가 감소해 26.5%가 된다.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큰 이전소득은 공공부조로 33.2%에 이르고, 그 뒤를 이어 아동양육비가 11.1%, 사적이전이 3.7%의 빈곤감소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IV-34>는 이혼 전, 당시, 후의 여성의 빈곤지위와 그와 관련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먼저 이혼 전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을 보면 미성년아동수, 교육수준이 이혼 전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아동수가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2.85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85, $p < .001$). 여기서 빈곤지위는 소득대비육구비율로 측정된 것으로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분모(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성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86.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20, $p < .0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가구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고용 지위는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혼 전 취업 여부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빈곤지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편의 교육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프락시변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동류 혼으로 이해했을 때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을 만날 것이고, 남성의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의 지위와 정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남성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수준과 이혼 전 빈곤지위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표 IV-34> 이혼전후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혼 전		이혼당시		이혼 후	
	상관계수	Odds ratio	상관계수	Odds ratio	상관계수	Odds ratio
절편	-0.5355		0.3745		1.4649	
나이(년)	-0.0449	0.956	-0.0688*	0.934	-0.0194	0.981
미성년 아동 수	1.0485***	2.853	1.0771***	2.936	1.0925***	2.982
대제이상	-2.0320**	0.131	-1.3210*	0.267	-1.0959*	0.334
이혼 전 취업	-0.4168	0.659	0.1713	1.187	0.7857	2.194
이혼 당시 취업	-	-	-0.3150	0.730	-0.6735	0.510
현재 취업	-	-	-	-	-3.1630***	0.042
이혼기간	-	-	-	-	-0.0326	0.968
합의이혼	-0.2969	0.743	-0.0862	0.917	-0.0710	0.932
사적이전(만원)	0.0027	1.003	-0.0081	0.992	-0.0310	0.969
공공부조(만원)	-0.0224	0.978	0.0037	1.004	-0.0123	0.988
전남편이전(만원)	-	-	-	-	-0.0384*	0.962
-2 log L	208.641		238.393		211.534	
Model χ^2	36.764***		42.806***		80.338***	
df	7		8		11	
N	252		252		252	

이혼당시를 보면 빈곤지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변수는 여성의 나이, 미성년 아동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이는 이혼 전에는 빈곤지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갖지 않다가 이혼당시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을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6.6%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0688, p < .05$). 왜 나이가 이혼당시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결혼기간이 길다는 것을 반영할 것이고 이는 경제적 자산이 나이가 적은 이혼여성 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이는 이혼 후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수는 이혼 전과 같은 이유로 빈곤지위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성년자녀수가 빈곤지위와 갖는 관계가 이혼 전에 비해 이혼 당시에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혼 당시는 미성년 자녀가 1명 더 있을 때마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2.9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전 2.85배 보다 0.09 포인트 증가했다 ($1.0771, p < .001$). 반면 교육수준은 이혼 당시보다 빈곤지위와 갖는 관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한부모)가구가 그렇지 않는 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7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전 86.9%보다 13.6%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끝으로 이혼 후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독립변수들을 보면 미성년아동수, 교육수준, 현재취업, 전 남편이전 규모 등의 변수로 나타났다. 미성년아동수가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여성(한부모)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2.98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25, p < .001$). 이혼 전 2.85배, 이혼 당시 2.93배에 비해 각각 0.13포인트, 0.05포인트씩 증가한 수치다. 즉, 미성년아동수와 빈곤지위와의 관계는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를 거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수준은 여성의 학력이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6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959, p < .05$).

미성년아동수와는 반대로 학력수준은 이혼 전, 당시, 후를 거치면서 빈곤지위와 관계의 정도가 약화되어 나타났다. 이혼 전과 비교하면 교육수준과 빈곤지위와의 관계정도가 20.3%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

의 학력수준에 비해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혼 전과 이혼 당시의 취업여부는 빈곤지위와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이혼 후 취업여부는 이혼 후 빈곤지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95.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630, p < .001$).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여성의 취업여부가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혼 전과 이혼 당시의 취업여부는 각각의 빈곤지위와 관련이 없는 데 이혼 후 빈곤지위가 취업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성의 취업 지속성 여부가 가구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여성의 취업 경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계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던 이혼 후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특별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요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편의 지원(아동양육비)은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어 전남편으로부터 소득이전이 만원 증가할 때마다 여성(한부모)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3.8%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0384, p < .05$). 빈곤지위와 다른 이전소득이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표 9>에서 보면 이혼 후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큰 공공부조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구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소득 중 실질적 빈곤감소효과는 전남편으로부터 이전되는 아동양육비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소결 및 함의

본 분석은 이혼을 경험한 여성(한부모)가구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이혼의 경제적 영향과 한국사회안전망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는 서구사회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혼 전 후 여성의

소득수준은 대략 작게는 6%에서 크게는 7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endell, 1986; Bumpass, Sweet and Martin, 1990; Garfinkel, 1992; McLanahan and Booth, 1989; Teachman and Paasch, 1994). 한국사회의 경우 그 감소 폭은 51.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혼 전 여성의 취업여부가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업으로 인해 여성의 인적자본이 재생산 노동에 투여됨으로써 결혼해체 후 여성과 아동이 빈곤에 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관계 내에서 취업을 한 여성과 재생산 노동에만 집중한 여성과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무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통계결과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혼 전 노동시장 참여가 이혼 후 여성의 빈곤지위와 무관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무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여성개인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 자신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혼 전에 취업한 여성과 전업주부 여성의 빈곤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만약 여성이 직업경력에 따라 (인적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과 고용상의 지위가 상승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본 분석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다.

셋째, 이혼 전, 당시, 후를 거치면서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변수들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아동의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는데 반해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이혼 전후를 비교해 보면 무려 20.3%나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전남편으로부터 이전되는 자녀 양육비가 빈곤감소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모 일정부분 부담한다면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그 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점증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남성생

계부양자를 준거로 제도화된 사회보장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은 양(편)부모의 자녀로서, 부부로서, 자녀의 부모로서, 한 부모가구의 가구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families) 안에서 생활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윤홍식, 2004). 즉, 사회보장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 가구라는 전형적인 가족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능을 다원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경력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를 가족 내 돌봄 등의 필요에 따라 경력단절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비정규, 임시직 노동자 등)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야한다. 이미 유럽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특수한 조건에 처한 시민들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별도의 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한부모가구를 위한 한부모가구수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관계없이 일을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분석 결과에서 보듯 여성에게 일이란 한국사회에서 독립적 가구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성은 혼인지위가 변화하면 (이혼하면) 대부분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독립적 시민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내에서 남녀가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영국과 같은 방법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저임금일 자리를 고착화 시킬 뿐,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수요창출 방법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사회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요구된다. 단순히 형식적인 직업훈련과 재교육이 아닌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실제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되 창출된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지

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리고 수요측면에서는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의 노동수요에 상응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측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급측면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일을 통한 복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심리·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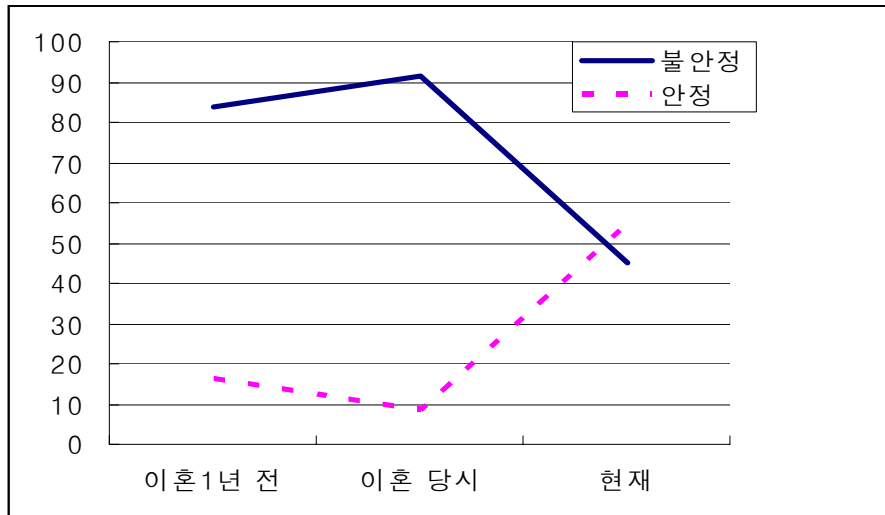
가. 이혼 여성의 심리·정서적 변화

이혼 후 적응의 문제는 경제적 수입, 사회활동, 한부모기의 적응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성에 따라 이혼전과 이혼 후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진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결정의 시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이혼 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출발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신의 노력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반면 이혼 후에는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Volgy, 1991;변화순, 1996).

<표 IV-35> 이혼 여성의 심리·정서적 상태

이혼여성의 심리정서 상태	매우불안정	대체로 불안정한편	대체로 안정한편	매우 안정적	계	Mean*
이혼1년 전	84(30.7)	146(53.3)	40(14.6)	4(1.5)	274(100.0)	1.87
이혼 당시	118(43.1)	132(48.5)	21(7.7)	2(0.7)	274(100.0)	1.66
현재	39(14.2)	85(31.0)	133(48.5)	17(6.2)	274(100.0)	2.47

* Mean 값이 높을수록 안정적임.



〔그림 IV-6〕 이혼 여성의 심리 정서적 상태

<표 IV-36>은 이혼 여성들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혼 1년 전에는 84.0%가 불안정한 편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혼 당시 또한 91.6%가 불안했다고 응답하여 외국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 현재의 심리 정서적인 상태에서는 45.2%가 불안정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빠르게 안정 상태로의 적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이혼 후의 여러 가지 또 다른 스트레스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표 IV-36〉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정서적 상태의 차이

		이혼1년 전		이혼 당시		현재	
		M(SD)	T	M(SD)	T	M(SD)	T
자녀 유무	자녀없음	1.98(.73)	1.2	1.69(.62)	0.32	2.71(.62)	2.3*
	자녀있음	1.85(.70)		1.65(.66)		2.42(.84)	
현재 취업 유무	일자리있음	1.92(.71)	2.54*	1.71(.67)	2.87**	2.55(.78)	3.98***
	일자리없음	1.63(.65)		1.41(.5)		2.04(.84)	
이혼 형태별	협의이혼	1.92(.70)	2.54*	1.70(.66)	2.01*	1.92(.70)	-.30
	재판상이혼	1.63(.68)		1.48(.59)		1.63(.68)	
교육 수준별		M(SD)	F	M(SD)	F	M(SD)	F
	중졸이하	1.68(.67)	1.64	1.58(.61)	0.24	2.26(.87)	1.94
	고졸	1.85(.66)		1.66(.64)		2.44(.79)	
	대졸이상	2.00(.86)		1.70(.72)		2.64(.86)	

<.05, **<.01, ***<.001

* Mean 값이 높을수록 안정적임

이혼 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이중 몇 가지 변인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녀유무, 교육수준, 현재 취업 유무, 이혼 형태별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혼여성들의 자녀유무가 이혼 1년전, 이혼 당시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혼 후 현재 정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없는 것은 현재 정서적인 안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반대로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취업 유무는 이혼 여성의 전반적인 정서 부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가 있음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 이혼 과정 중 현재 정서가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3.98, $p<.001$). 이혼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협의이혼이 이혼1년 전 정서와 이혼당시 정서에 더 안정적이었다. 이는 부부간의 합의된 의사가 정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이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해소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이혼과정의 정서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은 정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이혼 여성의 스트레스

구분	매우 많다	약간 있는 편	별로 없는 편	전혀 없다	모름/ 무응답/ 해당없음	계	Mean*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경제적 어려움	162(59.1)	83(30.3)	29(10.6)	-	-	274(100.0)	2.49
직장문제 및 이직 문제	96(35.0)	100(36.5)	61(22.3)	12(4.4)	5(1.8)	274(100.0)	2.08
취업의 어려움	105(38.3)	85(31.0)	60(21.9)	23(8.4)	1(0.4)	274(100.0)	2.02
자기능력개발 기회가 적음	100(36.5)	99(36.1)	54(19.7)	21(7.7)	-	274(100.0)	2.01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112(40.9)	83(30.3)	33(12.0)	12(4.4)	34(12.4)	274(100.0)	2.27
부모부양의 어려움	30(10.9)	42(15.3)	39(14.2)	125(45.6)	38(13.9)	274(100.0)	0.93
가사노동의 부담	60(21.9)	101(36.9)	78(28.5)	35(12.8)	-	274(100.0)	1.68
건강상의 문제	57(20.8)	97(35.4)	92(33.6)	28(10.2)	-	274(100.0)	1.67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부족	85(31.0)	108(39.4)	56(20.4)	25(9.1)	-	274(100.0)	1.92
가정 내의 정신적 신체적 폭력	13(4.7)	26(9.5)	72(26.3)	163(59.5)	-	274(100.0)	0.59
가족과 헤어져 사는 어려움	35(12.8)	88(32.1)	93(33.9)	58(21.2)	-	274(100.0)	1.36

* Mean 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

현재 이혼 한 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훈육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각각 59.1%와 40.9%로 응답 하였으며 그 외에 직장문제 및 이직 문제, 취업의 어려움, 자기능력개발 기회의 어려움,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부족 등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정 내의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라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다는 비율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부양의 어려움 또한 45.6%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8> 자녀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T
	M	SD	M	SD	
가사노동의 부담	1.25	0.97	1.85	0.95	2.13*
경제적 어려움	2.08	0.79	2.58	0.63	2.64**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부족	1.58	0.79	2.05	0.93	1.71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1.42	1.31	2.33	0.83	3.54**
직장문제 및 이직 문제	1.33	0.99	2.13	0.88	3.02**
건강상의 문제	1.83	0.84	1.78	0.92	-.19
취업의 어려움	1.58	1.17	2.05	0.99	1.57
자기능력개발 기회가 적음	2.00	1.13	2.06	0.96	0.20
부모부양의 어려움	0.92	1.08	0.93	1.13	0.03
가정 내의 정신적 신체적 폭력	0.50	1.00	0.65	0.89	0.57
가족과 헤어져 사는 어려움	1.00	1.21	1.38	0.92	1.36

* <.05, **<.01, ***<.001

* Mean 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

본 연구에서 응답한 이혼 여성들의 82%는 현재 자녀가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에 양육의 문제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표 VII-4>는 응답한 이혼 여성들이 자녀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혼 여성에 있어서 높은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특히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직장 및 이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사노동의 부담’은 자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적 보조, 자녀양육 방식, 직장 및 이직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의 변화

이혼 여성은 가족과 친구, 전배우자,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러한 변화는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혼 후

사회적 연결망은 친구의 상실과 변화, 사회적 활동의 중단, 친척과의 소원한 관계 등을 통해 측정되는데 친척은 이혼한 여성에게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망의 상실은 이혼 여성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혼자들은 가족과 친구를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여기며 가족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 친구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더 큰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기혼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는 경험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이혼자들의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표 IV-39〉 이혼 여성의 친구 및 직장동료와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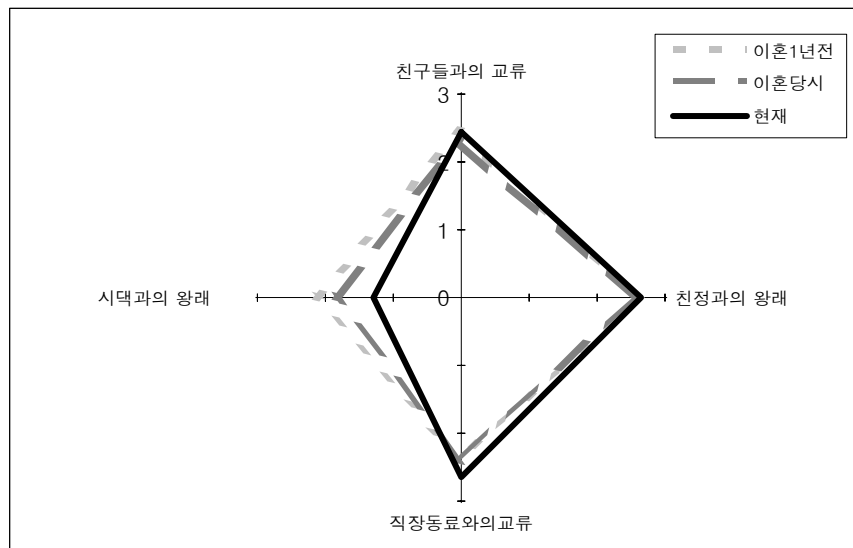
	구분	전혀 교류없음	별로 교류없는편	대체로 교류많은편	매우 교류많음	해당없음/ 모름, 무응답	계
친구들과 의 교류	이혼1년 전	31(11.3)	117(42.7)	113(41.2)	13(4.7)	-	274(100.0)
	이혼 당시	43(15.7)	131(47.8)	91(33.2)	9(3.3)	-	274(100.0)
	현재	52(19.0)	111(40.5)	99(36.1)	12(4.4)	-	274(100.0)
직장동료 와의 교류	이혼1년 전	22(8.0)	58(21.2)	53(19.3)	8(2.9)	133(48.5)	274(100.0)
	이혼 당시	18(6.6)	67(24.5)	51(18.6)	10(3.6)	126(46.7)	274(100.0)
	현재	27(9.9)	67(24.5)	109(39.8)	24(8.8)	46(17.2)	274(100.0)

이혼한 여성들은 친구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혼전과 현재에서 다소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교류가 많은 편에 속하는 응답비율이 이혼전이나 이혼 당시, 현재에 각각 45.9%, 36.5%, 40.5%로 이혼당시는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다 서서히 교류빈도가 증가하나, 이혼 1년전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동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혼 전이나 이혼 당시에는 해당 없음에 해당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전업주부에 해당하던 여성들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율이 현재에는 대체로 교류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혼 후에 이혼 전보다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V-40> 이혼 여성의 친정 및 시댁과의 관계

	구분	전혀왕래 없음	별로 왕래 없는 편	대체로 왕래 가 잦은 편	매우왕래가 잦음	해당없음	계
친정 과의 왕래 정도	이혼1년 전	22(8.0)	101(36.9)	123(44.9)	28(10.2)	-	274(100.0)
	이혼 당시	32(11.7)	115(42.0)	105(38.3)	22(8.0)	-	274(100.0)
	현재	31(11.3)	101(36.9)	109(39.8)	33(12.0)	-	274(100.0)
시댁 과의 왕래 정도	이혼1년 전	67(24.5)	118(43.1)	71(25.9)	17(6.2)	1(0.4)	274(100.0)
	이혼 당시	99(36.1)	130(47.4)	35(12.8)	9(3.3)	1(0.4)	274(100.0)
	현재	205(74.8)	58(21.2)	9(3.3)	1(0.4)	1(0.4)	274(100.0)



[그림 IV-7] 이혼 여성의 시점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변화

이혼 여성들은 친정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혼 후에도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이혼 전에 친정과의 왕래가 없던 사람들은 이혼 후에도 별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혼전 왕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에서 이혼당시 46.3%, 이혼후 현재 51.8%로 증가하고 있어 역시 시간이 지날

수록 관계는 빈번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시댁과의 왕래 정도는 이혼 후에 전혀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빈도가 7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별로 왕래가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21.2%였다.

<표 IV-41> 시점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와 심리·정서간의 관계

		이혼1년전 심리·정서	이혼당시 심리·정서	현재의 심리·정서
친구들과 의 교류	이혼1년전	.047		
	이혼당시		.138*	
	현재			-.033
직장동료 들과의 교류	이혼1년전	.248**		
	이혼당시		.076	
	현재			.283**
친정과의 왕래	이혼1년전	-.043		
	이혼당시		.061	
	현재			.004
시댁과의 교류	이혼1년전	.146*		
	이혼당시		.040	
	현재			-.004

* >.005 ** >.01

이혼 시점 변화에 있었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구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경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 1년전, 그리고 이혼후의 교류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혼전후에는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이혼당시는 친구와의 관계가 심리정서적 안정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시댁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혼1년전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결 및 함의

본 분석은 자녀유무, 교육수준, 현재 취업 유무, 이혼 형태별에 따라 심리정서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혼을 전후로 해 여성들은 이혼전에는 불안정하다가, 이혼당시에는 그 정도는 더욱 심하지만, 이혼 후 1년이 지난 현재에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혼후 자녀양육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빈곤화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한다.

이혼여성들의 자녀유무가 이혼 1년전, 이혼 당시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혼 후 현재 정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없는 것은 현재 정서적인 안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반대로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취업 유무는 이혼 여성의 전반적인 정서 부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가 있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 현재 정서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이혼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협의이혼이 이혼 1년 전 정서와 이혼당시 정서에 더 안정적이었다. 이는 부부간의 합의된 의사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이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해소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에 양육의 문제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특히 자녀유무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가사노동의 부담,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부족, 건강상의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적 보조, 자녀양육 방식, 가사노동의 경감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혼 시점 변화에 있었던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전, 그리고 이혼후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친구 혹은 직장동료간의 교류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27
2. 정책제언	129

1. 요약

본 연구는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서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혼을 전후로 취업유무의 변화 과정을 경험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이혼이후 직업변화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는 이혼으로 여성 스스로가 생계부양자가 되기 위한 취업활동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변화이다. 이들이 직업변동을 직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새롭게 취업한 직종의 대부분은 서비스판매직이거나 단순노무자이며, 이들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직이거나 임시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여성의 취업 여부와 고용의 질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혼 후 여성들이 새롭게 편입된 직군은 사회적으로 게토화(Ghettoization)되어 있는 불안정하고 저임금 직군에 몰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직업경력이 일천하거나 인적자본이 열악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구조가 성분절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계급지위를 이혼 전후로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혼 후 여성들이 확보한 노동시장 지위가 임시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지위 이동은 주로 하향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만의 개인적 계급지위를 이혼 전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주변부 노동계급을 제외한 여타 계급 하강 이동의 폭은 크지 않다. 그러나 남편의 계급지위와 아내의 계급지위를 결합하여 지배의 원칙에 따라 판별한 결과와 이혼 후 여성만의 단독계급지위만을 비교한 결과, 모든 계급에서 하강이동의 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성들의 새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통로는 주변부 노동시장의 비정형노동이라는 한정된 입직 분야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지위와 직종이 주요한 판별준거로 사용된 계급변화 분석결과 역시 직업변화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혼한 여성 가운데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자산 확보가 마련된 여성들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게 되

지만, 이들이 이동해 갈 수 있는 직업이나 계급적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혼여성의 과거 직업경력이나 학력, 전문적 기술 등에 따라 개인적인 편차는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혼 후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은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본 분석은 이혼을 경험한 여성(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영향과 한국사회안전망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는 서구사회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혼 전 여성의 취업여부가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업으로 인해 여성의 인적자본이 재생산 노동에 투여됨으로써 결혼해체 후 여성과 아동이 빈곤에 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관계 내에서 취업을 한 여성과 재생산 노동에만 집중한 여성과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혼 전 노동시장 참여가 이혼 후 여성의 빈곤지위와 무관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무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여성 개인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 자신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혼 전에 취업한 여성과 전업주부 여성의 빈곤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셋째, 이혼 전, 당시, 후를 거치면서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변수들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아동의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는데 반해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전남편으로부터 이전되는 자녀양육비가 빈곤감소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모 일정부분 부담한다면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그 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혼후 여성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보았다. 이혼여성들의 자녀유무가 이혼 1년전, 이혼 당시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혼 후 현재 정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없는 것은 현재 정서적인

안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반대로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취업 유무는 이혼 여성의 전반적인 정서 부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가 있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 현재 정서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이혼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협의이혼이 이혼1년 전 정서와 이혼당시 정서에 더 안정적이었다. 이는 부부간의 합의된 의사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이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해소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에 양육의 문제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특히 자녀유무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가사노동의 부담,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부족, 건강상의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적 보조, 자녀양육 방식, 가사노동의 경감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혼 시점 변화에 있었던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전, 그리고 이혼후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친구 혹은 직장동료간의 교류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제언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관계없이 일을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분석결과에서 보듯 여성에게 일이란 한국사회에서 독립적 가구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성은 혼인 지위가 변화하면 (이혼하면) 대부분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독립적 시민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내에서 남

녀가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영국과 같은 방법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저임금일자리를 고착화 시킬 뿐,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수요창출 방법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사회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요구된다. 단순히 형식적인 직업훈련과 재교육이 아닌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실제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되 창출된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리고 수요측면에서는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의 노동수요에 상응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측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급측면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일을 통한 복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변화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성별직종분리,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진입의 증가로 인한 성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혼을 전후로 응답자의 49%가 이혼이후 직업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는 사실은 이혼으로 여성 스스로가 생계부양자가 되기 위한 취업활동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변화이다. 특히 이혼 후 여성들이 확보한 노동시장 지위가 임시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지위 이동은 주로 하향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노동시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은 임금노동, 여성은 돌봄노동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혼 한부모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대응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남성생계부양자를 준거로 제도화된 사회보장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혼 전 여성의 취업여부가 이혼 후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

항상에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혼 전 노동시장 참여가 이혼 후 여성의 빈곤지위와 무관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무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여성개인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 자신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점증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남성생계부양자를 준거로 제도화된 사회보장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은 양(편)부모의 자녀로서, 부부로서, 자녀의 부모로서, 한 부모가구의 가구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families) 안에서 생활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보장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 가구라는 전형적인 가족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능을 다원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경력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를 가족 내 돌봄 등의 필요에 따라 경력단절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비정규, 임시직 노동자 등)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야한다. 이미 유럽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넷째, 더불어 특수한 조건에 처한 시민들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별도의 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한부모가구를 위한 한부모가구수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부자복지법」에서 모·부자 중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모자보호시설(일명 모자원)에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에 한해서 생계급여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부자복지사업 대상은 시설거주자가 아니라 재가이혼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가 이혼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의 주대상은 재가 저소득 모·부와 모자보호시설 거주자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모·부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동안의 낮은 생계비 지원으로 참여자가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한부모 가구를 위한 한부모가구수당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 대학등록금이나 학자금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대학생 자녀들 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혼전 혹은 이혼과정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혼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이혼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혼후 여성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혼 전, 이혼 당시의 심리상태가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협의이혼이 이혼1년 전 정서와 이혼당시 정서에 더 안정적이었다. 이는 부부간의 합의된 의사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이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유책주의에 입각한 재판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야만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혼과정에 갈등을 조정, 해소할 수 있는 갈등해소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 후 정서적 안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 이혼당시,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주위의 편견을 없애고, 대화에 있어서 이혼당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혼 시점 변화에 있었던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혼당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전, 그리고 이혼후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친구 혹은 직장동료간의 교류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위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혼과 관련된 후속적 연구로서 이혼후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연

구를 통해 젠더간 비교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혼은 여성에게만 아니라 남성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미친다. 따라서 이혼후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후속적 연구를 통해 이혼이 젠더간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법적 지위는 국가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서구의 경우 커플의 결합에서 결혼 전 동거현상이 일반화된 현상이며, 동거시 서로 헤어지는 비율도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혼인으로 커플의 결합이 시작되고, 동거율은 서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부부의 헤어짐은 이혼으로 이어지며,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서구의 이혼율과 한국의 이혼율은 커플의 출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향후 각국의 동거율에 대한 비교와 이로 인한 해체율의 연구를 통해 이혼이 갖는 비교문화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이혼후 여성/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패널연구를 제안한다. 본 분석은 여성(한부모)가구의 이혼 전후 소득수준에 대한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혼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자료수집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 관계로 사실상 한국사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을 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두 번째는 본 자료가 회고적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한 관계로 소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의 소득자료를 조사해도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분석에서 2~3년 전의 소득 수준을 묻는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셋째, 이혼 후 기간을 일치시키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이혼가구의 경제적 적응력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 1년 후와 3년 후를 동일한 항목인 이혼 후로 묶어서 분석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대표성이 있는 패널자료를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교성(2006),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2006년 11월 4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김만웅(2004),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장혜경 외(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김현주·장혜경 외 8인(2005), 『우리 시대 이혼이야기: 가족주기별 사례연구』, 가족연구시리즈 4, 양서원.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이태진·김유경·송수진(2001), 『최근 가족해체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1998),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19: 64-79.
- _____(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 551-583.
- 김정자(1985),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3(1).
- _____(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 『여성연구』 6(3).
- 김학주(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복지학』, 13호.
- 김현미·손승영(2003), “성별화된 시공간적 노동개념과 한국여성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학』 19권 2호: 63-96.
- 김혜경(1992),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한국가족의 역할변화”, 『여성과 사회』.
- 김혜영(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인권”, 『아시아 여성연구』. 42집. 9-46.
- 김혜영(2004),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 숙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심포지움발표문.
- 김혜영·이은주·윤홍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집 1호: 5-51.
- 김혜영·이은주·윤홍식(2005), 『한국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복지정책』, 학진

결과보고서.

김혜영 · 장혜경 · 김영란(200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모지환 · 박상하 외(2004), 『사회정책론』, 학지사.

박경숙(1999), “여성과 남성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 활용의 비교 및 정책 제언”, 『한국사회복지학』 37: 143-169.

박복순(2004), “자녀양육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민사법연구』 제12집 2호.

박순일(1994),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박영란 외(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2004), “빈곤의 여성화: ‘신빈곤’ 시대의 여성과 탈빈곤 정책의 뉴패러다임”, 『아세아연구』 61-96: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박영란 · 정진주 · 황정임 · 권문일 · 김창엽 · 석재은 · 엄규숙 · 유태균 · 정인숙 · 황수경(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미(2004),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언”, 『한부모 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박재규(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3: 81-112.

박홍주(2004),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의 주변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권 3호: 67-97.

박홍주 · 이은아(2004), “기혼여성노동자의 일 · 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 20권 2호: 141-178.

변화순(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 백경희 · 김현주(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2002), 『한국의 이혼1 : 혼인상태』, 통계청.

변화순 · 조은희(2003), 『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 조은희 · 백승흠(2003), 『이혼후 배우자 부양법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위원회.

백선희(2000),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사회복지학』 43: 76-105.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319.
- 신수아·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29-141.
- 신경아(2001), “노동시장과 모성, 가족의 문제: 남성중심적 노동자모델을 넘어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51호: 97-123.
- 신화용·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6집: 57-76.
- 여성가족부(2006),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 _____(2005), 「내부자료」.
- 여지영(2002),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 유정원(2000),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제4, 5, 6차 대우 패널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윤홍식(2003(a)), “저소득모자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상황과 복지』 16: 131-172.
- _____(2003(b)),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63.
- _____(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윤홍식·김혜영·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서 본 여성가구주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여성가구주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 이혜경·최은영(1997),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4: 42-185.
- 장혜경·민가영(2001),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장혜경·송다영 외(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 장혜경·김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김혜영·김영란 외 (2005), 『모자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연구』, 국회에

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숙(2001), “여성가구주, 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어머니나 노동자냐”, 『경제와 사회』 51: 38-67.

진미석·노일경·손유미(2003), “직업지도에 나타난 여성직업구조의 특성”,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6권 제 1호.

최은영(2004), “한국보육정책의 공공성 평가”, 『보건복지포럼』 22-30.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2),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노동』, 8월호.

한혜경(2000), “IMF 이후 빈곤 및 실업대책에 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호, 215-233.

국민연금관리공단(2005), 『국민연금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03),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_____ (2004),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_____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내부자료」.

_____ (2004), 「2003년도 상담통계」.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4, 2005),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6),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제1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1) 「내부자료」.

_____ (2002),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번역자료)”.

_____ (2004), 「한부모 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통계청(2002), 『2002년 인구동태연보』, 이혼·혼인편.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연보』(1996-2003).

통계청(2004), 『한국의 사회지표』.

▶ 해외문헌

- Abramovitz, M. 1989. *Regulating the Lives of Women*, South End Press.
- Arendell, T. 1986. *Mothers and Divorce: Legal, Economic and Social Dilemma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ckingham, A. & Saunders, P. 2004. *The Survey Methods Workbook*, New York: Polity.
- Bumpass, L., Sweet, J., & Martin, T. 1990. "Changing patterns of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747-756.
- Casper, L. M., MacLanahan, S.S. and Garfinkle.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594-605.
- Christoper, L. Kahren, 2000. *The Effects of Family, Work and Welfare on Mother's Poverty in the U.S and across Western Nations*. The University of Arizona.
- Christopher, K. 2001. "Single motherhood, employment, or social assistance: Why are U.S. women poorer than women in other affluent nations?",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 285.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
- Clapp, G. 2000. *Divorce and New Beginnings*. John Wiley & Sons Inc.
- Childcare Commission. 2001. *Looking to the Future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care Commission.
- Daly, M. 1994. "Comparing welfare State: Towards a gender friendly approach", in Sainsbury. *Gendering Welfare States*. London: Sage Pub.
- DaVanzo, J. & Rahman, O. 1993. "American Families: Trends and Correlates", *Population Index*, 59, pp. 350-386.
- Duncan, Simon and Edwards, Rosalind. 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UCL Press.
- Duncan, G. & Hoffman, S. 1985. "A re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22. pp. 485-497.
- Garfinkel, I. 1992. "Bringing fathers back in the child support assurance

- strategy", *The American Prospect*, 9. pp. 74-83.
- Glennerster, H. 2002. "United States poverty studies and poverty measurement: The Past twenty-five years", *Social Service Review*, 76. 83-107.
- OECD. 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4: Canad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France: OECD*.
- Lino, M. 1995. "The economics of single parenthood: Pas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 pp. 99-114.
- Lott, B. & Bullock. H.E. 2001. "Who are the poor",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7(2). 189-206.
- Lewis, Jane and Aström, Gertrude. 1992. "Equality, difference and state welfare: Labor market and family policies in Sweden". *Feminist Studies* vol.18. no.1.
- Lewis and Hobson, B. 1997. *Lone Mothers in European Welfare Regimes-Shifting Policy Logic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
- Miller, J. 1996 a. "Family, State and Personal Responsibility : the changing balance for lone mothers in the UK". *Feminist Review*.
- Miller, J. 1996 b. "Mothers, workers, wives: Comparing policy approaches to supporting lone mothers", in Elizabeth Bortolaia Silvia(ed.). *Good Enough Othering?*, Routledge: London.
- McLanahan, S. and K. Booth.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557-580.
- Molina, O. 1999. "The effect of divorce on African American working wom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2, pp.1-15.
- Nelson, J. Barbara. 1984. "Women's poverty and women's citizenship: Som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marginality". *Signs* Vol.10. No.2.
- Ozawa, M. & Yoon, H. 2003. "Economic impact of marital disruption on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s*, 25(8), pp.611-632.
- Pascall, G. 1997. *Social Policy: A New Feminist Analysis*, Routledge: London and N.Y.
- Peterson, J. 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21.

- Pie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
- Pressman, S. 2002. "Explaining the gender poverty gap in developed and transitional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36. no.1. 17-40.
- Rank, M. R., Yoon, H. S. and Hirschl. T.A. 2003. "American Poverty as a structural failing: Evidence and Argument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 30(4):3-25.
- Seltzer, J. 1994. "Consequences of marital dissolution for childre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 pp. 1247-1268.
- Smith J. 1986. "The Paradox of woman poverty: Wage-earning women and economics transformation". *Woman and Poverty*. ed. Clare C. Novak and Myra H. Strobe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 Smock, P. 1993.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young women over the past two decades". *Demography*, 30, pp. 353-371.
- Stacy, J. 1990. *Brave New Families*. New York: Basic Book.
- Stanworth, M. 1984. "Women and class analysis". *Sociology*, 18, 161-169.
- Teachman, J. & Paasch, K. 1994. "Financial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Future of Children*, 4, pp. 63-83.
- Vecchio, N. & K. C. Roy. 1998. *Poverty, Female-Heads Households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Greenwood Press.
- Weiss, R. 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006 연구보고서-3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2006년 12월 28일 인쇄

200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177-2 93330 <정가 5,000원>

KWDI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